



2020

한국인문사회과학회

가을 학술대회

주제 한국전쟁 70년, 동북아 평화를 모색하며

일시 2020. 11. 28.(토) 12:00-18:00

장소 ZOOM 화상회의실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20 한국인문사회과학회 가을 학술대회 일정

□ 주제: 한국전쟁 70년, 동북아 평화를 모색하며

□ 일시: 2020. 11. 28.(토) 12:00-18:00

□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순서

12:00-12:20 온라인 접속 (ZOOM 입장)

12:20-12:30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연구윤리교육

12:30-13:20 1부 신진 연구자 발표회 사회: 조 의행(서울신대)

발표자	발표제목
이 지택 (재) 다솜이연구소 연구원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조직몰입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매개효과 -

<토론> 임 상헌(경희대), 오 단이(숭실대)

13:20-13:30 휴식

13:30-14:20 2부 손보기 기념강좌 사회: 이 황직(숙명여대)

강연자	권 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명예교수)
강연주제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 언어 연구 역사의 흐름 -

14:20-14:30 휴식

14:30-16:20 3부 주제 발표회 사회: 김 세훈(숙명여대)

발표자	발표 제목
조 의행(서울신대)	한국전쟁의 국제경제학적 의미: 평화와 번영의 자본주의 체제 성립
조 배준(상지대)	한국전쟁의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와 평화
김 성호(고려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동북아 평화에 던지는 시사점
이 광수(국민대)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양안관계
채 진원(경희대)	'문명충돌'을 막는 한반도 문명전환의 논리 탐색
박 중현(숭실대)	회복적 정의에 따른 한일 간 역사화해 가능성 탐색

16:20-16:30 휴식

16:30-17:30 종합토론 사회: 오 미영(가천대)

주제 담론	한국전쟁 70년, 동북아 평화를 모색하며
-------	------------------------

17:30-18:00 총회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윤리헌장 ●

제정 : 2007. 06. 16

제1차 개정 : 2008. 11. 22

한국인문사회과학회(이하 학회) 연구윤리헌장(이하 헌장)은 학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 모두가 수행해야 할 연구윤리의 대강을 제시하고자 규정되었다.

1. 학회 회장 및 모든 임원은 학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회의 각종 사업과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2. 학회원은 학회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학회 회원은 연구와 출판활동에 있어 학자로서의 본분과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4. 위 항목에 대한 위반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를 다룰 독립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

제정 : 2008. 05. 31

제1차 개정 : 2008. 11. 22

제2차 개정 : 2009. 05. 30

제3차 개정 : 2010. 09. 25

제1조(목적)

한국인문사회과학회(이하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 규정(이하 윤리규정)은 학회의 윤리헌장을 구현하고, 학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1.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는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의 선임은 정회원 가운데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4.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6.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이사로 한다.

제4조(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2. 윤리 헌장에 위배되었다는 제소장이 접수될 경우 윤리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해야 한다.
3.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사안을 조사할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시점에 제소된 사실과 소명의 기회에 대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4.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5. 윤리헌장의 위배 여부, 위배에 따른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재적위원의 2/3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제5조(윤리위원회의 임무)

1.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사항의 조사, 심의 및 의결
2. 징계의 종류와 공표
3. 윤리 헌장과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규칙의 개정 및 보완
4. 회원들에 대한 윤리 헌장과 윤리 규정의 공지 및 홍보

제6조(윤리 헌장 위반시 제소)

1.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이 담긴 제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2. 제소장은 헌장 위배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3.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4. 한 번 제소되어 판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차 제소할 수 없다.

제7조(연구 및 출판 활동에서의 연구윤리 위배사항의 규정)

1. 연구 및 출판활동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연구 윤리에 위배된다.
 - ① 타인의 연구결과, 연구과정, 연구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
 - ②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
 - ③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변경, 누락함으로써 결과를 왜곡하여 사용, 유포하는 행위
 - ④ 연구내용과 결과에 기여한 사람의 논문저자 자격을 임의로 박탈하거나, 연구내용과 결과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2. 위의 위배사항은 본 학회원의 연구 및 출판활동과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연구결과물에 적용된다.

제8조(재제)

1. 연구 및 출판 활동에서의 연구 윤리 위배사항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제조치를 내릴 수 있다.
 - ① 위배사항이 심각할 경우나 2회 이상의 위배할 경우 제명

- ② 위배 확정 이후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및 이 사실의 학회소식지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 ③ 기 발간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취소 및 학회 소식지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게재 취소 사실 공지
 - ④ 기 발간된 논문의 취소시 이를 논문 등록기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
 - ⑤ 심사중인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한 게재불가 통보 및 이 사실의 학회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 ⑥ 위반 및 재제 사실의 학회지를 통한 공지
2. 1항의 재제조치는 복수로 부과될 수 있다.

제9조(비밀 보장 및 소명 기회)

- 1.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이 윤리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제소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 2. 윤리현장과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에게는 두 차례의 소명 기회를 준다.
 - ① 1차 소명 : 심사 단계
 - ② 2차 소명 : 제소 사실의 확정 이후 제재 종류를 심의하는 단계
- 3. 단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소된 회원의 소명 기회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제10조(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의 개정은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본 윤리규정은 학회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으로 발효된다.

1부 신진 연구자 발표회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 조직성장에
미치는 영향**

－ 조직몰입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매개효과 －

이 지택((재) 다솜이연구소 연구원)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¹⁾

-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

이 지택(다솜이사회서비스연구소)

제 1 장 서론

제 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신자유주의는 무한 경쟁 가속화와 세계화를 통해 양적성장을 이룩한 반면에 사회양극화, 계층간 불평등, 소득격차 심화라는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런 사회문제는 모든 국가 간의 국제 관계, 경제적 관계, 그리고 비영리조직에도 영향을 미쳤다. 곧 다문화 사회와 난민 발생의 문제는 노동인구의 이동으로 인한 복지문제, 주거문제, 일자리문제 등으로 인해 단순히 한 국가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가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문제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와 국가 간 불평등 심화, 개인 간 심화, 계층 간의 갈등 등 모든 문제가 촉발되고 확대되었다. 특히 자본주의 이념의 확대와 급격한 경제성장과 저출산·고령화,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구조변화(강소현, 박정운, 2020), 소득불평등과 빈곤층의 확산, 자살율 증가, 인터넷·게임 중독, 노동자 이주민 증가 등의 사회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되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조직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8년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취약계층은 고용·복지를 위한 큰 규모의 공공재정이 취약계층의 보호 및 자활지원에 투자되었고(방하남, 강신욱, 2012),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2020년 현재 약 4천여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받았으며(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취약계층의 고용확대, 사회서비스제공 등 조직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조직성과의 요인 연구로서 국외에서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 변화를 위한 종업원의 조직몰입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조직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하였고(Morrison & Phelps, 1999),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통해 종업원의 직무태도개선이 가능하며 직무태도로서 조직몰입을 주장하였다(Kuratko & Hodgetts, 2001). 국내에서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윤종록, 김형철, 2006), 조직문화와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혁신성, 진취성 및 위험감수성이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연웅, 2011). 또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업무수행 능력과 기업성과를 증진시킨다는 것과(황상규, 2013),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우수할수록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이진민, 2015).

대표적인 비영리조직으로서의 사회복지관은 조직성과를 달성하고 급속한 사회변화와 환경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혁신성과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사회적가치지향성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복지관의 지속가능성과 조직성과 측면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자원개발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전체 운영의 50%가 정부보조금이고 그 외 재원은 기부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민간자원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2018) 자료에 의하면 1999년도 총 기부금 1조 6천억에서 2017년 13조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관 역시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통한 민간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1) 본 논문은 이지택 연구원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하였음.

안정성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관운동을 위한 경영측면 강화이다. 사회복지기관은 정부의 보조금, 사업비 지원 등 적합한 기준에 맞춰서 관리되고 운영되면서 재원이 정기적으로 지원되지만 민간자원 확보는 마케팅이나 홍보 측면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용자에 맞춘 홍보효과와 마케팅을 제시한다면 상당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4섹터의 등장으로 인한 시장생태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정부 및 공공영역의 제 1섹터, 민간영역의 제 2섹터와 비영리조직으로 대표되는 제 3섹터에 이어 제 4섹터가 등장하였는데 제 4섹터란 민간 기업처럼 시장에서 경쟁하며 영리를 추구하되 정부나 시민사회처럼 공익·사회미션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으로 정의된다(뉴욕타임즈, 2007). 2007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시행 등의 움직임은 사회복지조직의 시장화와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수시로 시장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복지관은 사회적목적 달성이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 일선에서 일하는 구성원 또한 이러한 헌신과 가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신준섭, 안형기, 2013)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목적이라는 미션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사회적성과를 이룩해왔다. 현재까지는 정부보조금과 지원금, 예산 신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으나 추후 다변적이고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재정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조직이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성과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어려움을 기회로 활용하여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의 상위요인인 조직성과 달성을 꾀하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가치지향성 등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정대용, 김태현, 2013). 또한 조직이 사회적으로 불확실한 환경과 변화상황에서도 조직의 목표달성 및 성과 향상을 통해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본적인 구성요소로 간주되며 조직이 사회적으로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혁신을 통해 사회적 욕구를 해소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무형적 개념을 실제적인 수준으로 다루어 지속가능한 기회를 제공한다(Marcus, 2019). 따라서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형평성, 상호연계, 다양성, 삶의 질, 민주성 및 거버넌스를 통할 때 사회적 필요 충족과 사회적 발전이 지속되어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조직은 2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시스템으로서 조직의 지속적 발전과 성과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조직몰입 연구는 경영학과 영리조직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비영리조직도 조직이라는 성격과 시스템이 동일하기에 비영리조직에서 조직몰입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을 매개로 할 때 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의 조직성과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인 사회적 기업가정신,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직몰입 상호간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기업에만 국한하여 성과를 연구했던 사례가 대부분이며 사회복지관에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 구성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을 매개로 활용한 연구는 현재까지는 없기에 사회복지관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의 지속적인 발전 및 성과 그리고 조직성과 달성에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 조직성과(사회적성과, 경제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은 사회복지관의 조직성과(사회적성과, 경제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 조직성과(사회적성과, 경제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사회적 기업가정신 이론적 고찰

미국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슈페터의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최초연구가 시행된 이후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1980년대 비영리영역의 정부지원 재정보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사회현안과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비영리조직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확대를 통하여 자체재정확보를 도모하고 사업과 수익의 활성화를 모색하면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주요 연구주제로 대두되었으며 현장에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Dees, 2001; Williams, 2008).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이후 시작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이용탁, 2009; 배귀희, 2011; 최조순, 2012; 이준희, 2016; 임현지, 2019)가 진행되었으나 선진국 대부분은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조직 및 사회적 비즈니스 관리자, 공공부문 참여자들이 창업부터 성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물들을 극복해내는 지속적인 과정이자 태도, 문화, 경영방법으로 이해하며 공공조직을 비롯한 비영리에서도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김명희, 2013). 사회복지관이 급변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실현이라는 사명을 토대로 사업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기업가정신과 사회적가치지향성이 결합된 형태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복지관 조직의 가치와 정신을 기초로 환경·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사회복지시장 생태계의 다양한 경쟁조직의 출현상황에서 조직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Schumpeter, Druker, Say 등이 정립한 혁신적 기업가정신의 개념과 Bill Drayton, Dees 등이 주장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의 정신이 통합되어 완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재정, 조영복, 2019).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Dees(1998)는 사회적 미션, 책임성, 지속적 혁신 활동의 대담성, 새로운 기회 포착, Mort 등(2003)은 사회적 미션의 수행, 균형된 판단,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기회인식과 활용, Brooks(2009)은 혁신성, 위험감수성, 운명에 대한 통제감각, 독립성, 성취지향, 지역사회 인식, 모호성에 대한 관용, 사회적 관심을 구성요소로 보았다. 국내연구의 경우 배귀희(2011)는 사회적 목적,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최조순(2012)은 혁신성, 사회적가치지향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이준희(2016)는 사회적가치추구,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임현지(2019)는 사회적 가치 지향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을 구성요소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반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가치지향성’ 4가지 요소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로 수용하고자 한다.

(1)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장성희(2012)는 “사회적 기업가정신, 조직문화 및 네트워크 활동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 및 사회적성과를 향상시킨다고 하면서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더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최근 Daniel 외(2019) 연구에서도 221개 국가의 사회적경제 주체 표본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정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정도가 조직성과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공혜원(2019)은 5년 이상 사회적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가, 공공기관 담당자, 사회적기업 근로자 등 총 17명을 스노우볼 방식(snowball)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하였고, Nvivo 질적연구 분석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기업 성장은 물론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이진민(2015)은 사회적기업의 선행요인(전략, 경영역량, 사업환경,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성과의 매개역할 분석을 통해 전략과 경영역량이 뛰어날수록,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우수할수록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3)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선행연구

Kuratko와 Hodgetts(2001)는 조직기업가정신을 통해 종업원의 직무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직무태도로서 조직몰입을 주장하였다. 윤종록, 김형철(2006)도 조직기업가정신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조직기업가정신을 통한 조직몰입의 긍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했으며, 조직기업가정신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인하였다.

정영웅(2011)은 조직문화와 기업가정신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한 결과 기업가정신 중에는 혁신성, 진취성 및 위험감수성이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으며,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한 경우, 기업가정신 변인 중에서는 혁신성과 진취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절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이론적 고찰

보편적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정의는 그 자체의 단일 개념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구성하고 있는 한 영역으로서 정의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브룬트란트 보고서(1987)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의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 정의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우리공동의 미래, 1987).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성하고 있는 한 축으로 이해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social sustainability) 개념은 ‘형평성이 고려된 사회적인 필요(social needs)를 충족시키면서 사회적인 발전(social development)을 지속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초기 연구인 Yiftachel & Hedgecock(1993)의 연구는 원칙(principles)을 중심으로 하여 개념화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자들은 호주의 서부 지역인 퍼스(Perth)를 사례로 한 연구에서, 도시 수준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계획이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도시가 사회적인 필요를 이행하는 공간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도시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커뮤니티와 형평성, 도시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도시계획이 필요하며, 이 원칙들을 중심으로 개념

화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후 WACOSS(Western Australia Council of Social Services)의 주거와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Barron & Gauntlett(2002)의 연구는 기존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보다 더 자세하고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이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정의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형평성, 민주성·거버넌스, 삶의 질, 상호연계 등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했고, 각 구성요소들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규명하였다. <표 1>은 Barron & Gauntlett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사회적 지속가능성 구성요소

Barron&Gauntlett(2002)	기타 선행연구	연구자
형평성(equity)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공평성(fairness) 평등(equality) 공평한 접근(fair access) 권리의 분배(distribution of rights)	Yiftachel & Hedgecock(1993) Sachs(1999) Chiu(2003) Pacione(2009) 김리영(2010)
다양성(diversity)	포섭(inclusion) 화합(reconciliation) 조화(harmony)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Polèse & Stren, (2000) City of Vancouver(2005)
상호연계 (interconnectedness)	커뮤니티(community) 상호작용(interaction)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Yiftachel & Hedgecock(1993)
민주성·거버넌스 (democracy&governance)	적응성(adaptability)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Sachs(1999) Partridge(2005)
삶의 질(qualityoflife)	복지(well-being) 안전성(security) 안정성(stability) 생활 조건(living condition)	Chiu(2003) Partridge(2005) Pacione(2009) 김리영(2010)

출처 : Barron, L., & Gauntlett, E. (2002). 재정리.

형평성(equity)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지는 원칙이다. Barron & Gauntlett(2002)의 정의에 따르면, 형평성은 모든 시민, 특히 취약계층과 빈곤계층을 위해 평등한 기회와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며 다양성(diversity)은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를 증진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상호연계(interconnectedness)는 공식적·비공식적·제도적 수준에서 지역사회 내외적으로 연결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과정과 체계를 말하며 민주성과 거버넌스(democracy & governance)는 민주적인 절차와 개방적이고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개인적·조직적·커뮤니티 수준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좋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Barron & Gauntlett, 2002).

장영란(2011)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향후 종업원의 고용 증가, 향후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과 대기업으로부터의 지원 가능성으로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진민(2015)은 사회적기업의 선행요인(전략, 경영역량, 사업환경,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과의 매개역할 분석을 통해 전략과 경영역량이 뛰어난수록,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우수할수록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제 3절 조직몰입의 이론적 고찰

조직몰입의 개념은 교육 및 경영, 복지분야 등 다수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조직몰입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 내리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조직몰입의 개념은

Porter, Mowday 및 Steers(1976)가 정의한 것으로, 조직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면서 긍정적인 경향을 다음 세 가지로 요소로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의 일원으로 잔류하고 싶은 강한 욕구, 둘째, 조직의 목표 및 가치에 관한 신뢰와 수용, 셋째, 조직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 등의 요소를 말한다. 이들은 위와 같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조직몰입을 측정하는 ‘조직몰입 척도(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 : OCQ)’를 개발 및 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다수의 분야에서 학자 및 연구자들에 의해 계속 사용되고 있다.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는 조직과 조직구성원 간의 연결이라는 근본인식에서 출발하여,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는 다르지만 대체로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에 대한 반응 및 조직에 대한 애착심을 나타내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한다(Porter, 1974).

국내연구에서는 1986년 첫 번째 조직몰입 연구가 시작된 이후 2014년까지의 259편의 조직몰입관련 연구를 분석한 자료(이목화, 문형구, 2014)에 따르면 Mowday & Porter가 제시한 개념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미 해당 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된 Mowday & Porter의 조직몰입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조직몰입의 개념을 Porter와 Mowday(1974)가 정의한 개념으로써 Porter 등이 조직몰입 측정 시에 활용하였던 척도를 바탕으로 조직몰입을 다음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첫째, ‘충성심(loyalty)’은 조직에 관한 구성원들의 애착의 감정 정도를 나타내었고, 둘째, ‘자발성(willingness)’은 조직 목표의 달성을 위해 뚜렷하게 노력하고자 하는 의사 정도를, 셋째, ‘가치수용(Value acceptance)’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수용하고 신뢰하려는 감정을 나타내어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조직몰입과 조직성과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보육학, 유아교육학, 교정학, 관광학 등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정미, 김규수(2016)는 조직몰입도의 중요성은 경영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조직에 대한 몰입이고 조직원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가 곧 조직 내 소속감의 향상을 가져오며, 결근 및 이직률의 감소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조직 내 구성원들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조직성과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김정희, 김동춘(2012)은 조직몰입이 직무성과를 증진시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조직 구성원 간의 유대와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욕망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제 4절 조직성과의 이론적 고찰

조직성과는 조직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사회적성과는 조직 활동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헌 및 안정, 환경보존, 지역사회 및 공익적 투자 등을 포함할 수 있는데(이은영, 2012), 이를 사회적성과라고 한다(Moshe & Lerner, 2006). 사회복지조직의 성과는 과거 사회적 가치의 관점으로써 사회적성과에 집중되고 중요시 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적성과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적성과는 조직의 사명을 달성하는 정도를 말한다면, 경제적성과는 조직의 사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확보(박민용, 2014)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자원 개발의 도전에 직면한 사회복지조직에 있어서 경제적성과의 달성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경제적성과를 대표하는 지표는 지속적 매출 증가, 경영자립도 향상, 수익적 목표 달성, 고객만족도 상승 등이다(Baum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성과를 경제적 목적의 실현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중심으로 설계 및 투입하여 산출된 결과를 경제적인 목적과 사회적인 목적에 따른 성과로 보았으며, 조직성과의 구성과 정의를 재정리한 내용은 <표2>와 같다.

<표 2> 조직성과의 구성과 정의

구분	정의	관련학자
경제적 성과	경영자립도 향상, 지속적 매출 증가, 고객만족도 상승, 수익적 목표 달성	Baum 외(2001), McGee, Dowling & Megginson(1995), Merz & Sauber(1995)
사회적 성과	지역사회공헌, 자부심, 지역환경 보존, 공익적 투자, 사회의 안정화, 지역사회로부터 환영	Kanter & Summer(1987), Poter(1995), Moshe & Lerner(2006)

출처 :Campbell(1977), 이은영(2012) 재인용, 수정보완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 대상 연구(이진민, 2015; 전해선, 채명신, 2017; 김문준, 2018; 김진경, 한형서, 최영근, 2018; 최무현, 고은주, 2019)와 사회복지기관 대상 연구(김태현, 2014)에서 조직성과를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로 분석함을 확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과 측정 방식에서도 조직단위의 분석을 통한 조직성과 측정연구(장영란, 홍정화, 차진화, 2012; 강문실, 김윤숙, 2016; 김문준, 2018; 김진경, 한형서, 최영근, 2018)과 조직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분석단위를 통한 조직성과 분석연구(이광우, 권주형, 2008; 이용탁, 2011; 나선영, 이성근, 2014; 김숙연, 2015; 이준희, 김상욱, 2016; 전해선, 채명신, 2017)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를 조직전체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의 성과에 대한 인식을 조직성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기업가정신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는데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는 앞선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요소도 연구되어졌다(배귀희 외, 2014). 많은 연구가 기업가의 정신과 경제적인 성과의 관점에서 연구(Covin & Slevin, 1991; Lumpkin & Dess, 1996; 장성희, 반성식, 2010)되기도 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이광우, 2008)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경제적인 성과와 사회적인 성과를 모두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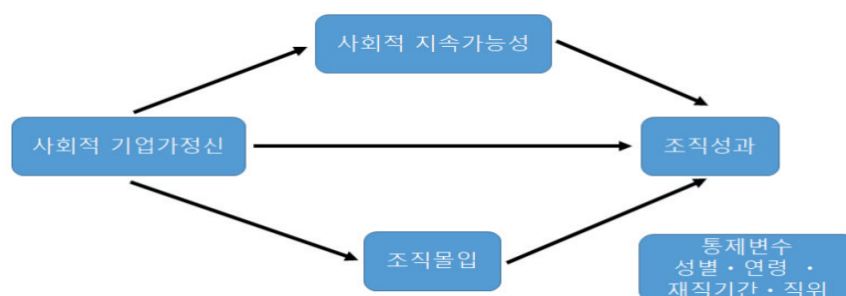
제 3 장 연구방법

제 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독립변수이며 조직성과는 종속변수이다.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은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설정

(1)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사회복지조직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진행된 김태현(2014)과 반성식 외 (2011)은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간의 연구를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중요함을 증명하였다(이슬기, 2009; 김태현, 2014; 반성식 외 2011; 정숙균, 2015).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성과에 직접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연구는 부재하지만,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사회적기업의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래 가설 1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복지관 조직성과(사회적성과, 경제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복지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복지관 사회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복지관 경제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조직몰입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에 관련된 사회복지 연구는 국내·국외 연구가 많지 않음을 확인했고 경영학과 체육학, 서비스산업학 등 타 학문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국외연구(Morrison & Phelps, 1999; Kuratko & Hodgetts, 2001)와 국내연구(윤종록, 김형철, 2006; 정연웅, 2011)에서도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통한 조직몰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가설 2를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 그리고 조직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성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와 사회적성과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상호관계를 밝혀낸 연구(장영란, 2011; 이진민, 2015)와 조직몰입과 조직성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조직몰입에 대한 Meyer et al.(2002)의 세 가지 차원의 조직몰입(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메타연구가 있었다. 또한 조직몰입과 성과와의 관계의 연구(Konovsky & Cropanzano, 1991; Meyer et al., 2002; Luchak & Gellatly, 2007; 김정희, 김동춘, 2012), 조직몰입이 조직의 목표추구와 조직성과와의 긍정적 영향을 밝혀낸 논문이 있었다(박봉규, 2015; 윤성혁, 정기수, 2019).

선행연구를 보았을 때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조직몰입은 조직성과에 대해 유의미한 경우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의 연구들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주된 연구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 모두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 4를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3.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조직성과(사회적성과, 경제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사회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경제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조직몰입은 조직성과(사회적성과, 경제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1. 조직몰입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2. 조직몰입은 사회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3. 조직몰입은 경제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의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는(이슬기, 2009; 반성식 외, 2011; 이용탁, 2011; 강문실, 김윤숙, 2016; Weerawardena & Sullivan, 2006; Daniel, 2019), 다수의 연구가 지속가능성 또는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이지만,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을 매개로 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을 매개변수로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에 연구가설 5, 6 을 설정하게 되었다.

연구가설 5.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사회적성과, 경제적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5-1.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5-2.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5-3.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경제적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 6.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사회적성과, 경제적성과)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6-1.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6-2.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성과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6-3.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경제적성과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제 2절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1. 조사대상

기존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의 대표자나 임원에게만 국한하여 진행된 연구(이용탁, 2009; 전혜선, 채명신 2017)와 전 직원을 대상(김태현, 2014)으로 진행된 연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복지관의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의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근거로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각 단계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응답설문을 구성하여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한 후 5회에 걸친 설문지의 문구와 단어를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측정도구를 확정하였다.

둘째, 앞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에 근거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사회복지관 중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최고 관리자(관장, 시설장), 최고 중간관리자(부관장/국장/부장), 중간관리자(과장/대리/팀장),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설문 설명 및 요청 후 메일과 우편으로 2020년 3~4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자료 수집은 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하여 협조를 받고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조사는 현장 방문과 인터넷 메일과 우편을 통해 배부 및 직접 방문회수 방법으로 진행하여 총 307부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 연구에 사용될 수 없는 12부의 불성실한 설문지 답변을 제외한 총 295부를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넷째, IBM SPSS 26.0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빈도, 기술통계와 사회적 기업가정신,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직몰입, 조직성과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세 집단 이상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경우 집단 간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등분산 가정을 확인하여(Levene's test, $p < .05$) 사후검증인 Scheffe's post-Hoc을 실시하였고 Scheffe's post-Hoc이 어려울 경우 LSD's post-Hoc를 통한 사후검증을 진행 하였다.

다섯째,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여섯째,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각각 변수의 기초통계를 실시한 후 설문 항목의 신뢰도 확보와 설문항목 간 타당도 확보를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타당도 확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와 공차한계를 분석하고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사이의 각각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의 효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제 3절 변수 정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 조직성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는 조직이 추구하는 사업수행의 결과정도로 정의된다. 이를 측정하는 도구는 사회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을 고려하는데, 사회적성과지표로는 Kanter & Summer(1987)와 Poter(1995), Moshe & Lerner(2006)의 연구를 중심으로 6개 문항과, 경제적성과지표로 Baum 외(2001)과 McGee, Dowling & Megginson(1995)과 Merz and Sauber(1995)의 연구를 중심으로 6개 문항으로 총 12개 항목을 한글로 번역하여 국내

실증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김태현(2014)의 12개 항목을 활용하여 사회복지관에 적용될수 있도록 약간의 수정과정을 통해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개별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은 아래와 같다.

사회적성과는 우리조직이 추구하는 사업의 사회적 결과정도를 말하며(Moshe & Lerner, 2006) 측정항목으로는 “① 이용자 만족, ② 직원의 자부심, ③ 지역환경보존 기여, ④ 이익을 공익적 사업에 투자, ⑤ 사회의 안정성에 기여, ⑥ 지역사회로부터 환영”이다.

경제적성과는 우리조직이 추구하는 사업의 경제적 결과 정도로(Merz & Sauber, 1995) 측정항목은 “① 지속적으로 자원의 증가, ② 자립도의 향상, ③ 고객만족상승, ④ 자원개발 목표달성, ⑤ 예산절감 및 사용효율성, ⑥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증가”이다. 측정도구는 총 12항목,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높을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0.864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 사회적기업가정신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가 요구하는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행동이라고 정의하며(Peredo & McLean, 2006; Shaw & Carter, 2007),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Miller(1983)가 경험적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기반으로 Helm & Andersson(2010)이 사용하였던 3가지 요인에서 배귀희(2011)의 사회적목적이라는 요인을 추가하였다. 이용탁(2009), 배귀희(2011), 최조순(2012), 이준희(2016), 임현지(2019)의 사회적기업가정신 문항을 조정 및 활용하여 혁신성 5개 문항, 진취성 5개 문항, 위험감수성 5개 문항, 사회적가치지향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문항들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개별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은 아래와 같다.

측정도구는 총 19항목,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0.915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Barron & Gauntlett(2002)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변수를 직접 변안하여 본 연구의 분석목적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측정항목으로는 “① 형평성(불이과 불평등의 원인발견 및 해결추구), ② 다양성(문화 및 인종 다양성 인정, 다양한 배경 및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와 수용), ③ 상호연계(이용자의 소속감, 사회활동참여 증가) ④ 삶의 질(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 향상, 교육과 훈련의 기회 제공, 주택개선 기회 제공), ⑤ 민주성 · 거버넌스(다양한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 명확하고 이해가 용이한 의사결정과정, 충분한 사업기간 보장, 사업 종료시 생겨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려)”이다. 측정도구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측정기준은 ‘매우 그렇다(5점)’ 문항에서 시작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문항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답한 문항의 점수가 높음에 따라 사회적 지속가능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0.922로 나타났다.

다른 매개변수인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Mowday, Porter, Steers(1982)의 정의를 사용하였다. 이 학자들의 정의에서 소개된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조직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반영하는 5문항,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노력하는 자발성을 반영하는 5문항, 조직의 가치를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치수용을 반영하는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Mowday, Porter, Steers가 개발한 조직몰입 척도(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OCQ)를 한글로 번역하여 국내 실증연구에서 타

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3, 5, 9, 11, 13, 14, 15번 총 7문항은 역문항으로 역코딩처리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0.933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조직성과로서 응답자들의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 중 조직성과에 대해 통제변수를 설정한 연구에서 원숙연, 임현지(2018)는 성별, 연령, 업무경력을 설정하였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이광우, 권주형, 2008; 이용탁, 2011; 장영란, 홍정화, 차진화, 2012; 나선영, 이성근, 2014; 김숙연, 2015; 이준희, 김상욱, 2016; 전해선, 채명신, 2017; 김문준, 2018; 김진경, 한형서, 최영근, 2018)들은 통제변수를 설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에 대해 개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기에 응답자의 특성에서 성별, 연령, 직위, 재직기간 총 4가지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는 각 변수의 특성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변수로서 성별은 0=여성, 1=남성, 연령은 0=34세 이하 1=35세 이상, 재직기간은 0=7년 미만, 1=7년 이상, 직위는 0=일반직원, 1=관리자, 최고 중간관리자, 최고 관리자로 더미변수로 처리·변경하여 회귀분석에 활용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 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

(N=295)

구분		명	%		구분		명	%
성별	남자	97	32.9	사회복지 총 재직기간	3년 미만	25	8.5	
	여자	198	67.1		3년 이상~5년 미만	57	19.3	
연령	30세 미만	55	18.6		5년 이상~7년 미만	52	17.6	
	30세~34세	89	30.2		7년 이상~10년 미만	57	19.3	
	35세~39세	57	19.3		10년 이상~15년 미만	61	20.7	
	40세~44세	43	14.6		15년 이상	43	14.6	
	45세~49세	25	8.5		M=8.82, SD=6.74			
	50세~54세	14	4.7	일반직원	159	53.9		
	55세~59세	12	4.1	관리자 (팀장, 대리, 과장)	97	32.9		
	M= 35.71, SD=7.19			직위	최고중간관리자 (부장, 국장, 부관장)	29	9.8	
현 기관 재직기간	3년 미만	112	38.0		최고관리자(관장, 시설장)	10	3.4	
	3년 이상~5년 미만	71	24.1					
	5년 이상~7년 미만	31	10.5					
	7년 이상~10년 미만	38	12.9					
	10년 이상~15년 미만	35	11.9					
	15년 이상	8	2.7					
M= 5.01, SD=4.03								

응답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과 관련된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응답자의 재직 기관 관련 특성

(N=295)

구분		명	%	구분		명	%
기관 설립 연도	1980년 이전	14	4.7	기관 유형	종합사회복지관	155	52.5
	1981년~1990년	21	7.1		장애인복지관	82	27.8
	1991년~2000년	152	51.5		노인복지관	58	19.6
	2001년~2010년	61	20.7	정규 직원 수	9명 이하	6	2.0
	2011년 이후	47	16.0		10명~19명	120	40.7
기관 의 위치	경기·인천권	172	58.3		20명~29명	64	21.7
	서울권	94	31.9		30명~39명	58	19.7
	부산·경남권	24	8.1		40명~49명	26	8.8
	강원·대전·충청·광주·전라	5	1.7		50명 이상	21	7.1

제 2절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차이

주요 변수의 성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사회적 기업가정신,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직몰입, 조직성과의 남자 평균이 여자의 평균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평균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938$, $p<.05$) 사회적 지속가능성($t=.315$, $p>.05$), 조직몰입($t=.296$, $p>.05$), 조직성과($t=1.344$, $p>.05$), 사회적성과($t=.997$, $p>.05$), 경제적성과($t=1.337$, $p>.05$)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요 변수별 연령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대상을 '30세 미만', '30세~34세', '35세~39세', '40세~44세', '45세~49세', '50세~54세', '55세~59세' 총 7 개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시행하였고 결과는 <표 6>와 같이 LSD'S post-Hoc를 통한 사후검증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247$, $p<.05$).

사회복지분야 총 재직기간에 따른 주요 변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현 기관 재직기간에 따라 '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 총 6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와 같이 사회적 기업가정신($F=4.110$, $p<.05$)과 조직몰입($F=4.636$,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복지분야 직위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직위에 따라 '최고관리자(관장, 시설장)', '최고 중간관리자(부관장, 부장, 국장)', '중간 관리자(팀장, 대리, 과장)', '일반직원' 총 4개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이 사회적 기업가정신($F=8.754$, $p<.05$), 조직몰입($F=5.871$, $p<.05$), 조직성과($F=2.994$,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제 3절 신뢰도 검증과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모두 0.864 이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요인분석에서 KMO는 모두 0.8이상의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Bartlett의 $p<.05$ 값을 만족하므로 요인분석의 결과는 모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주요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결과

개념		Cronbach's α	KMO와 Bartlett의 검정		
독립 변수	사회적 기업가정신	0.915	KMO		.91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667.135***
				자유도	171
매개 변수	사회적 지속가능성	0.933	KMO		.94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298.105***
				자유도	210
매개 변수	조직몰입	0.922	KMO		.93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695.191***
				자유도	105
종속 변수	조직성과	0.864	KMO		.89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263.357***
				자유도	66

***p<.001

제 4절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21.0을 활용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연구가설에 사용되는 중요한 변수들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직성과는 사회적성과($r=.869$, $p<.01$), 경제적성과($r=.887$, $p<.01$), 조직몰입($r=.511$, $p<.01$), 사회적 지속가능성($r=.570$, $p<.01$), 사회적 기업가정신($r=.358$, $p<.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성과는 경제적성과($r=.542$, $p<.01$), 조직몰입($r=.549$, $p<.01$), 사회적 지속가능성($r=.519$, $p<.01$), 사회적 기업가정신($r=.301$, $p<.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성과는 조직몰입($r=.356$, $p<.01$), 사회적 지속가능성($r=.482$, $p<.01$), 사회적 기업가정신($r=.327$, $p<.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각 측정변수들 간 상관계수가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를 제외하고,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0.8 이상이 없으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인 .01 미만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N=295)

구분		상관관계				
		조직성과			조직 몰입	사회적 지속가능성
		전체	사회적성과	경제적성과		
조직성과	전체	1				
	사회적성과	.869**	1			
	경제적성과	.887**	.542**	1		
조직몰입		.511**	.549**	.356**	1	
사회적 지속가능성		.570**	.519**	.482**	.472**	1
사회적 기업가정신		.358**	.301**	.327**	.278**	.288**

**p<.01

제 5절 매개효과 분석

1.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주요변수들 간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F=7.317$,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성과를 설명하는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11.0%로 나타났다($Adj R^2=.110$). 통제변수인 성별($t=.186$, $p=.853$), 연령($t=-.230$, $p=.819$), 재직기간($t=.418$, $p=.676$), 직위($t=-.118$, $p=.90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기업가정신($t=5.772$, $p<.001$)은 조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가설 1-1.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복지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사회복지관 구성원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증가할수록 조직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F=4.835$,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설명하는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7.0%로 나타났다($Adj R^2=.070$). 통제변수인 성별($t=1.176$, $p=.241$), 연령($t=-.632$, $p=.528$), 재직기간($t=-.529$, $p=.597$), 직위($t=-.029$, $p=.97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기업가정신($t=4.852$, $p<.001$)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가설 2-1.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F=7.261$,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몰입을 설명하는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10.9%로 나타났다($Adj R^2=.109$). 통제변수인 성별($t=.880$, $p=.379$), 재직기간($t=.561$, $p=.575$), 직위($t=.547$, $p=.58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령($t=3.015$, $p=.003$), 사회적 기업가정신($t=4.420$, $p<.001$)은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가설 2-2.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표 7> 조직성과에 미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독립변수→종속변수				독립변수→매개변수 (사회적 지속가능성)				독립변수→매개변수 (조직몰입)				독립·매개변수→종속변수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성별	.012	.065	.011	.186	-.076	.064	.072	1.176	.080	.091	.053	.880	-.035	.053	-.032	-.657
연령	-.018	.080	-.016	-.230	-.050	.079	-.046	-.632	.339	.112	.213	3.015*	-.072	.067	-.064	-1.086
재직기간	.028	.068	.025	.418	-.036	.067	-.033	-.529	.054	.096	.034	.561	.031	.055	.027	.553
직위	-.013	.108	-.008	-.118	-.003	.107	-.002	-.029	.083	.152	.039	.547	-.030	.088	-.020	-.337
사회적 기업가정신	.340	.059	.354	5.772***	.283	.058	.305	4.852***	.366	.083	.271	4.420***	.150	.051	.157	2.967***
사회적 지속가능성													.388	.058	.377	6.743***
조직몰입													.217	.041	.305	5.346***
R ²	.128				.088				.127				.428			
Adj R ²	.110				.070				.109				.412			
F	7.317***				4.835***				7.261***				26.501***			

* $p<.05$, *** $p<.001$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은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 조직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1단계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과 2단계의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와 공차한계를 분석한 결과 VIF는 가장 큰 값이 .956, 공차한계는 가장 작은 값이 1.046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직몰입이 조직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β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3-1, 4-1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조직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몰입은 조직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직몰입이 조직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직성장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F=26.501$,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이 조직성장을 설명하는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41.2%로 나타났다($\text{Adj } R^2=.412$). 통제변수인 성별($t=-.657$, $p=.512$), 연령($t=-1.086$, $p=.278$), 재직기간($t=.553$, $p=.581$), 직위($t=-.337$, $p=.73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은($t=6.743$, $p<.001$), 조직몰입은($t=5.346$, $p<.001$)로 조직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가설 3-1.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조직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연구가설 4-1. 조직몰입은 조직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사회복지관의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이 증가할수록 조직성장은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Sobel Test($z=3.942$, $p<.001$), 조직몰입의 Sobel Test($z=3.387$, $p<.001$)를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 조직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 조직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표 8>과 같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을 매개하여 갖는 간접효과를 갖고 있었고,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은 조직성장에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매개로 조직성장에 $B=.396(.401)$ 의 총효과를 갖고 있으며, 조직몰입을 매개로 $B=.394(.396)$ 의 총효과를 갖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조직성장에 $B=.388(.337)$ 의 직접효과를, 조직몰입은 조직성장에 $B=.217(.305)$ 의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효과분해

경로			직접효과 B(β)	간접효과 B(β)	총효과 B(β)
사회적 기업가정신	→	사회적 지속가능성	.340(.354)***	.056(.047)***	.396(.401)
사회적 지속가능성	→	조직성	.388(.337)***		.388(.337)
사회적 기업가정신	→	조직몰입	.340(.354)***	.054(.042)***	.394(.396)
조직몰입	→	조직성	.217(.305)***		.217(.305)

*** $p<.001$

2.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 사회적 기업가정신, 종속변수 사회적성과, 매개변수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직몰입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변수들 간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성과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F=5.632$,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성과를 설명하는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8.3%로 나타났다($Adj\ R^2=.083$). 통제변수인 성별($t=.258$, $p=.797$), 연령($t=-.089$, $p=.929$), 재직기간($t=.1089$, $p=.277$), 직위($t=.524$, $p=.6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기업가정신($t=4.957$, $p<.001$)은 사회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가설 1-2.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복지관 사회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사회복지관 구성원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증가할수록 사회적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표 9>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독립변수→종속변수				독립변수→매개변수 (사회적 지속가능성)				독립변수→매개변수 (조직몰입)				독립·매개변수→종속변수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성별	.019	.073	.016	.258	-.076	.064	.072	1.176	.080	.091	.053	.880	-.032	.060	-.027	-.538
연령	-.008	.090	-.006	-.089	-.050	.079	-.046	-.632	.339	.112	.213	3.015*	-.093	.075	-.074	-1.229
재직기간	.083	.077	.067	1.089	-.036	.067	-.033	-.529	.054	.096	.034	.561	.080	.063	.064	1.276
직위	.064	.122	.038	.524	-.003	.107	-.002	-.029	.083	.152	.039	.547	.040	.100	.024	.401
사회적 기업가정신	.329	.066	.309	4.957***	.283	.058	.305	4.852***	.366	.083	.271	4.420***	.118	.057	.111	2.066***
사회적 지속가능성													.353	.065	.309	5.428***
조직몰입													.302	.046	.382	6.582***
R^2	.101				.088				.127				.408			
Adj R^2	.083				.070				.109				.391			
F	5.632***				4.835***				7.261***				24.379***			

* $p<.05$, *** $p<.001$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1단계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과 2단계의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와 공차한계를 분석한 결과 VIF는 가장 큰 값이 .956, 공차한계는 가장 작은 값이 1.046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직몰입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β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3-2, 4-2.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직몰입은 사회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직몰입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성과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F=24.379$,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이 사회적성과를 설명

하는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39.1%로 나타났다(Adj $R^2=.391$). 통제변수인 성별($t=-.538$, $p=.591$), 연령($t=-1.229$, $p=.220$), 재직기간($t=1.276$, $p=.203$), 직위($t=.401$, $p=.68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지속가능성($t=5.428$, $p<.001$)과, 조직몰입은($t=6.582$, $p<.001$)로 사회적성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가설 3-3.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조직성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연구가설 4-2. 조직몰입은 사회적성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사회복지관의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이 증가할수록 사회적성가는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되어 진다.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Sobel Test($z=3.629$, $p<.001$), 조직몰입의 Sobel Test($z=3.660$, $p<.001$)를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 사회적성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 사회적성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표 10>과 같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을 매개하여 갖는 간접효과를 갖고 있었고,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은 사회적성가에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매개로 사회적성가에 전체적으로 $B=.362(.342)$ 의 총효과를 갖고 있으며, 조직몰입을 매개로 $B=.372(.339)$ 의 총효과를 갖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사회적성가에 $B=.353(.309)$ 의 직접효과를, 조직몰입은 $B=.302(.382)$ 의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효과분해

경로				직접효과 B(β)	간접효과 B(β)	총효과 B(β)
사회적 기업가정신	→ 사회적 지속가능성 →	사회적성가		.329(.309)***	.033(.033)***	.362(.342)
사회적 지속가능성	→	사회적성가		.353(.309)***		.353(.309)
사회적 기업가정신	→ 조직몰입 →	사회적성가		.329(.309)***	.043(.030)***	.372(.339)
조직몰입	→	사회적성가		.302(.382)***		.302(.382)

*** $p<.001$

3.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경제적성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경제적성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 사회적 기업가정신, 종속변수 경제적성가, 매개변수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직몰입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변수들 간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11>와 같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경제적성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성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F=5.603$,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경제적성가를 설명하는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8.3%로 나타났다(Adj $R^2=.083$). 통제변수인 성별($t=.078$, $p=.938$), 연령($t=-.305$, $p=.761$), 재직기간($t=-.298$, $p=.766$), 직위($t=-.712$, $p=.47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기업가정신($t=4.988$, $p<.001$)은 경제적성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가설 1-3.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복지관 경제

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사회복지관 구성원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증가할수록 경제적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표11>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구분	1단계 독립변수→종속변수				2단계								3단계 독립·매개변수→종속 변수			
					독립변수→매개 (사회적 지속가능성)				독립변수→매개 (조직몰입)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성별	.006	.077	.005	.078	-.076	.064	.072	1.176	.080	.091	.053	.880	-.037	.070	-.029	-.524
연령	-.029	.095	-.002	-.305	-.050	.079	-.046	-.632	.339	.112	.213	3.015*	-.053	.088	-.040	-.603
재직기간	-.024	.081	-.018	-.298	-.036	.067	-.033	-.529	.054	.096	.034	.561	-.016	.073	-.012	-.223
직위	-.092	.129	-.051	-.712	-.003	.107	-.002	-.029	.083	.152	.039	.547	-.102	.117	-.057	-.874
사회적 기업가정신	.350	.070	.311	4.988***	.283	.058	.305	4.852***	.366	.083	.271	4.420***	.182	.067	.161	2.719***
사회적 지속가능성													.422	.076	.348	5.543***
조직몰입													.133	.054	.160	2.487***
R ²	.101				.088				.127				.277			
Adj R ²	.083				.070				.109				.256			
F	5.603***				4.835***				7.261***				13.564***			

*p<.05, ***p<.001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1단계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과 2단계의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와 공차한계를 분석한 결과 VIF는 가장 큰 값이 .956, 공차한계는 가장 작은 값이 1.046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직몰입이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β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3-3, 4-3.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직몰입은 경제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직몰입이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성과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F=13.564$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이 경제적성과를 설명하는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25.6%로 나타났다($Adj R^2=.256$). 통제변수인 성별($t=-.524$, $p=.601$), 연령($t=-.603$, $p=.547$), 재직기간($t=-.223$, $p=.824$), 직위($t=-.874$, $p=.38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지속가능성($t=5.543$, $p<.001$)과, 조직몰입($t=2.487$, $p<.001$)은 경제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가설 3-3.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경제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연구가설 4-3. 조직몰입은 경제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사회복지관의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이 증가할수록 경제적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Sobel Test($z=2.373$, $p<.01$), 조직몰입의 Sobel Test($z=2.312$, $p<.01$)를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표 12>와 같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을 매개하여 갖는 간접효과를 갖고 있었고,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은 경제적성장에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매개로 경제적성장에 전체적으로 $B=.401(.360)$ 의 총효과를 갖고 있으며, 조직몰입을 매개로는 $B=.416(.354)$ 의 총효과를 갖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경제적성장에 $B=.422(.348)$ 의 직접효과를, 조직몰입에는 $B=.133(.160)$ 의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효과분해

경로			직접효과 B(β)	간접효과 B(β)	총효과 B(β)
사회적 기업가정신	→ 사회적 지속가능성	→ 경제적 성과	.350(.311)***	.051(.049)***	.401(.360)***
사회적 지속가능성	→	경제적 성과	.422(.348)***		.422(.348)***
사회적 기업가정신	→ 조직몰입	→ 경제적 성과	.350(.311)***	.066(.043)***	.416(.354)***
조직몰입	→	경제적 성과	.133(.160)***		.133(.160)***

*** $p<.001$

제 5 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 논의

본 연구에서 발견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함의를 제시하기 전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세 부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검증 결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조직성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반성식 외, 2011)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해외 선행연구 사례를 살펴본 결과 Daniel 외(2019) 연구에서도 221개 국가 사회적경제 주체의 표본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정도가 조직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정도가 조직성장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으나 사회복지시설현장의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가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성장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사회복지관의 구성원인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환경의 다원화와 급변화 속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기관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는데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중요함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 주민욕구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으로써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며 긍정적인 사회변혁을 일으키고 해결해야 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지속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진민(2015)의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우수

할수록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신광하(2016)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기업가정신 하위요소인 사회적 목적성,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에 대해, 사회적기업 운영의 전략적 요인인 시장경쟁력과 자원동원능력, 사회적기업의 조직 구조, 교육훈련을 매개요인으로 선정하여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사회복지관이 성과를 달성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고 이는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 불이익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형평성과, 현대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화와 인종의 수용과 이해를 넓혀 다양성을 높이게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소속감, 사회활동참여가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과 민주성과 거버넌스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관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복지관 관련 선행연구 논문을 검색하였으나 연구가 희소하여 타 학문영역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경영학, 체육학, 서비스산업학 등에서는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유사한 변수로 기업가정신 혹은 조직 기업가정신이라는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조직몰입은 조직헌신으로 해석하여 활용한 연구가 있었다. Lumpkin & Dess(1996)는 기업가정신과 조직헌신 등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Morrison & Phelps(1999)는 조직의 기업가정신이 조직의 변화를 위한 구성원의 조직헌신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Kuratko & Hodgetts(2001)는 조직의 기업가정신을 통해 종업원의 직무를 대하는 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직무태도로서 조직몰입을 주장하였다. 국내연구에서 윤종록, 김형철(2006)도 조직 기업가정신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조직기업가정신을 통한 조직몰입의 실질적인 긍정적 효과를 연구하였으며, 조직기업가정신이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복지관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일치되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조직과 개인의 가치일치를 강화하기 위한 기관의 정책적인 지원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거나 기존직원의 교육훈련과정에서 조직과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은 조직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조직성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성장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설정처럼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조직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적었으나 장영란(2011)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이진민(2015)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우수할수록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조직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를 통해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성과와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관의 지속가능성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문제 해결, 즉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지만 경제적 성과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조직성과의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몰입과 조직성과와의 선행연구 살펴본 결과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있었다. 국외연구에서 조직몰입에 대한 Meyer et al.(2002)의 연구는 세 가지 차원의 조직몰입(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정서적 몰입)의 메타연구 결과가 있었다. 그 결과, 조직몰입과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몰입은 성과에 긍정적 영향, 지속적 몰입은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onovsky & Cropanzano (1991)와 Luchak & Gellatly(2007)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조직몰입과 성과 간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선행연구가 있었다. 국내연구에서 배귀희 외(2014)는 조직몰입이 조직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하였다. 반면 보육학과 유아교육학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직헌신과 조직성과와 관련된 연구에서 이정미, 김규수(2016)는 보육교사의 조직헌신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조직 내부의 조직헌신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조직헌신은 근로자성과에 직접적인 영향과 구성원 간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조직 내 소속감이 높아지며, 이직과 결근률 감소로 이어져 결국 조직 내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인 조직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조직참여도와 직업성취도를 높여 조직에 이익이 되는 조직성과를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직접적으로 조직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는 모두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의 수준에 따라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성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복지관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함께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을 강화시키는 것이 조직성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 2절 연구의 함의 및 제언

1.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의 조직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비영리조직의 대표적인 사회복지관에도 적용가능하며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직성과의 하부요인인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복지관에 사회적성과와 더불어 경제적 성과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이 매개변수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됨으로써 사회복지관 조직성과의 매개요인들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였다.

둘째는,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재직기간, 직위)에 따른 주요 변수 평균차이 분석을 통해 구성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주요 변수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함으로 검증하였다. 사회복지관 구성원에서 남자가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복지분야에 재직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직위에 따른 주요 변수 평균 차이 분석을 통해서도 직위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업가정신, 조직몰입, 조직성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 실천적 함의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관의 조직성장을 위한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관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강조해야 한다.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팽창, 대상자의 수요와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비영리조직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사회적경제조직과 같은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단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과를 실현함과 동시에 사회적목적 달성을 통한 사회적성장을 추구하면서 사회복지관 역시 조직성장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사업예산부족 압박을 해결하고 급속한 환경변화와 흐름 속에서 재원조달, 민간자원 확보를 통한 예산 증대, 개인

및 지역사회 이용자 만족도 등 경제적성과를 달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몰입을 매개로 하였을 때 높은 수준의 조직성과를 창출 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복지관의 지속적인 발전 및 성과 그리고 조직성과 달성을 위하여 정책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관은 뚜렷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토대로 명문화된 조직의 미션과 사명을 가지고 지역사회 실천현장에서 사업을 시행해야할 것이다.

(3)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관의 조직성과를 위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과목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영역으로 새롭게 신설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2020)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수교육의 내용은 기존 사회복지 교과목의 심화과정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2018년 11월에 발표한 2019-2020년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에서도 사회복지경영론 커리큘럼이 제공되고 있듯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사회복지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조직경영을 위한 교육을 위해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같은 과목이 보수교육과목으로 신설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관 평가영역과 평가지표에서 경제적 성과항목에 대한 배점강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1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보건복지부, 2019)를 보면 경제적성과와 관련된 재정 및 조직운영항목과 지역사회관계 지표가 변경·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후에는 사업예산부족 압박을 해결하고 급속한 환경변화와 흐름 속에서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자원 연계 및 개발, 후원금 개발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앞으로 관련 분야에 지속적인 후속연구와 개발을 위해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대상을 사회복지관으로 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결과를 전체 사회복지관 구성원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추후 기관유형단위별, 지역단위별로 구분하여 조사가 이루어져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사회적 기업가정신 관련 척도의 활용에 있어서 사회복지관 특수성 반영에 부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 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구성요소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를 반영하여 재구성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관의 특성과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성을 검토 및 고려하여 실제 사용과 적용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찾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FGI 등을 활용한 질적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요인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거나 양적 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한 혼합연구방법론을 사용한다면 더 나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소현, 박정윤. (2020). 결혼경험 유무에 따른 비혼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4(1), 21-39.
- 공혜원. (2019).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개인특성 관점의 사회적 기업가정신. 「한국경영학회」 23(1), 127-152.
- 김리영. (2010). 압축도시의 공간구조 특성과 지속가능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문준. (2018).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이 사회적기업의 경영성파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리뷰」 9(3), 209-232.
- 김명희. (2013). 사회적 기업가정신 연구의 흐름과 동향: 미국과 유럽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4), 133-155.
- 김숙연. (2015). 사회적기업 가치가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50, 171-192.
- 김진경, 한형서, 최영근. (2018). 사회적기업의 경영특성이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리뷰」 9(4), 63-83.
- 김정희, 김동춘. (2012). 유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직무성과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 16(5), 10, 77-96.
- 김태현. (2014).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조직 내의 협조적행동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선영, 이성근. (2014). 사회적 기업의 경영특성이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6(3), 95-112.
- 박민용. (2014). 기업의 전통적 역량과 조직역량이 경제적 및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봉규. (2015).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헌신과 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연구: 진정성의 조절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3(7), 117 -124.
- 반성식, 김상표, 유지현, 장성희. (2011). 사회기업가정신, 조직문화 및 네트워크 활동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논집」 25(3), 49-82.
- 방하남, 강신욱. (2012). 취약계층의 객관적 정의 및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보고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보건복지부. (2019). 2021년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 배귀희, 박시남, 이윤재. (2014).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3), 251-276.
- 배귀희. (2011).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구조방정식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회보」 15(2), 199-227.
- 신광하. (2016).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전략운영요소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준섭, 안형기. (2013). 사회복지조직의 혁신성 효과 분석 연구. 「韓國行政學報」 47(1), 149-170.
- 윤성혁, 정기수. (2019). 관리자의 긍정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조직헌신 및 직무성과의 관계.

- 「한국콘텐츠학회」 19(8), 10-22.
- 윤종록, 김형철. (2006). 조직기업가정신에 관한 실증연구: 환경특성변수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1), 66-103.
- 이광우. (2008).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광우, 권주형. (2008). 사회적기업의 공익적 성과와 영리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23(1), 261-292.
- 이목화, 문형구. (2014). 국내 조직몰입 연구의 현황과 향후 방향.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8(2), 143-221.
- 이용탁. (2009). 사회적기업가정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기업 연구」 2(2), 5-28.
- 이용탁. (2011).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성과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인적자원관리연구」 18(3), 129-150.
- 이은영. (2012). 장기요양기관의 조직성과모형: 말씀볼드리지모델의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미, 김규수. (2016). 보육교사의 조직헌신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구조모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1(6), 83-109.
- 이재정, 조영복. (2019). 『사회적기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이프레스.
- 이준희, 김상욱. (2016).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17(4), 172-179.
- 이준희. (2016).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민. (2015).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현지. (2019). 사회적기업 성과의 영향요인: 이해관계자 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원숙연, 임현지. (2018). 사회적기업 사회적 성과의 영향요인: 지방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4(2), 195-231.
- 장성희, 반성식. (2010). 사회적기업의 기업가치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경제적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3(6), 479-496.
- 장성희. (2012). 창업가의 특성, 환경적 특성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업경영학회」 27(3), 223-245.
- 장영란. (2011).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영란, 홍정화, 차진화. (2012).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0(2), 175-207.
- 전혜선, 채명신. (2017). 사회적기업가 역량과 사회적가치추구가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8), 165-177.
- 정대용, 김태현. (2013). 비영리조직 구성원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가치일치를 매개로 조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9), 303-312.
- 정숙균. (2015).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남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연웅. (2011). 호텔조직문화와 기업가 정신이 호텔종사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비스산업연구」 8(3), 115 - 132.
- 최조순. (2012).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

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상규. (2013). 조직 내 기업가정신이 자기효능감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남지역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5(4), 345-356.

2. 해외문헌

- Barron, L., & Gauntlett, E. (2002). Housing and sustainable communities indicators project: stage 1 report—model of social sustainability. *Report of housing for sustainable community: the state of housing in Australia*.
- Baum, J. R., Locke, E., & K. G. Smith. (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92-303.
- Brooks, C. Arthur. (2009). Social Entrepreneurship: A Modern Approach to Social Value.
- Chiu, R. L. H. (2003). Social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ousing development: the experience of Hong Kong. In R. Forrest & J. Lee(Eds), *Housing and social change: East-West perspectives*. London, UK: Routledge 221-239.
- City of Vancouver. (2005). Policy report: definition of social sustainability. Vancouver, Canada: City of Vancouver.
- Covin, J. G., & Slevin, D. P. (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7-24.
- Daniel, P. M., Maria, G. G., Myrian, M. S., & Maria, P. A. M. (2019). Social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 study of the mediating role of distinctive competencies in marketing.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 101, August 426-432.
- Dees, J. G. (1998). The meaning of “social entrepreneurship.” Comments and suggestions contributed from the Social Entrepreneurship Founders Working Group. Durham, NC: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Social Entrepreneurship, *Fuqua School of Business*, Duke University.
- Dees, J. G. & Economy, P. (2001). “Social entrepreneurship”, in Dees, J. G., Emerson, J. and Economy, P. (Eds), *Enterprising Nonprofits: A Toolkit for Social Entrepreneurs*, Wiley, New York, NY.
- Helm, S. T., and Andersson, F. O. (2010). Beyond Taxonomy: An Empirical Validation of Social Entrepreneurship in the Nonprofit Sector. *Nonprofit Management&Leadership* 20(3), 259-276.
- Kanter, R. M., & Summers, D. V. (1987). “Doing Well While Doing Good: Dilemmas of Performance Measurement i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 Need for a Multiple-constituency Approach”, *A Research Handbook*, Yale University Press.
- Konovsky, M. A., & Cropanzano, R. (1991). Perceived Fairness of Employee Drug Testing as a Predictor of Employee Attitudes and Job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698-707.
- Kuratko, D. F., & R. M. Hodgetts. (2001). Entrepreneurship: A Contemporary Approach. San Diego : Harcourt College Publishers.
- Luchak, A. A., & Gellatly, I. R. (2007). A Comparison of Linear and Nonlinear Relations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Work Outcomes. *Journal of*

- Applied Psychology* 92, 786-793.
- Lumpkin, G. T., & Dess, G. G. (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Marcus, Tynnhamar. (2019). New Waves in Innovation Management Research (ISPIM Insights). *Vernon Press*.
- McGee, J. E., Dowling, M. J., & W. L. Megginson. (1995). Cooperative Strategy and New Venture Performance : The Role of Business Strategy and Management Experie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6, 565-580.
- Merz, G. R., and Sauber, M. H. (1995). Profiles of Managerial Activities in Small Firm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6, 551-564.
- Meyer, J. P., David, J., Herscovitch, L., & Topolnytsky, L. (2002).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A Meta-analysis of An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1), 20-52.
- Morrison, E. W., & Phelps, C. C. (1999). Taking charge at work: Extra role efforts to initiate workplace chang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2, 403 - 419.
- Moshe Sharir & Miri Lerner. (2006). Gauging the Success of Social Ventures Initiated by Individual Social Entrepreneurs. *Journal of World Business* 41, 6-20.
- Mowday, R. T., Porter, L. W., & Steers, R. M. (1982). Employee-organization link ages: *The Psychology of Commitment, Absenteeism and Turnover*. NY: Academic Press.
- Pacione, M. (2009). Urban geography: a global perspective (3rd edition). Oxford, UK: Route ledge.
- Partridge, E. (2005). Social sustainability: a useful theoretical framework. In *Australasi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28-30, September 2005, Dunedin, New Zealand.
- Peredo, A. M., & McLean, M. (2006). Social Entrepreneurship: A Critical Review of the Concept. *Journal of World Business*, 41, No. 1 56-65.
- Polèse, M., & Stren, R. E. (2000). The social sustainability of cities: diversity and the management of change. *Toronto, Canad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Porter, L. W., & Robert, D., Mowday, R. T. (1974). Unit performance, situational factors, and employee attitudes in spatially separated work unit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2, 231-248.
- Porter, L. W., Steers, R. M., Mowday, R. T., & Boulian, P. V. (1976).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among psychiatric technicia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 327-338.
- Porter, Michael E. (1995).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the Inner City". *Harvard Business Review* 55-71.
- Sachs, I. (1999). Social sustainability and whole development. In Becker, E., & Jahn, T. (Eds). *Sustainability and the social sciences(pp.25-36)*. New York, USA: Zedbook sand UNESCO.
- Shaw, E. & Carter, S. (2007). Social Entrepreneurship: Theoretical Antecedents and Empirical Analysis of Entrepreneurial Processes and Outcomes. *Journal of*

-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4(3), 418-34.
- Weerawardena, J. & Sullivan Mort, G. (2006). Investigation Social Entrepreneurship: a Multidimensional Mode. *Journal of World Business* 41, 21-35.
- Williams, C. C. (2008). Developing a culture of volunteering beyond the third sector approach. *Journal of Voluntary Sector Research* 1(1), 25-44.
- Yiftachel, O., & Hedgecock, D. (1993). Urban social sustainability: the planning of an Australian city. *Cities* 10, 139-157.

토 론 문

논문 제목 이 지택 (2020)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토론자 임 상헌(경희대)

먼저, 이 지택 선생님의 훌륭한 논문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술회의가 대학원 입시 면접과 겹쳐 이렇게 토론문을 보내드리게 된 것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논문은 이 지택 선생님이 쓰신 박사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복지관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 영향에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조직몰입이라는 변수가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인 연구를 하였습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 개혁의 물결이 1990년대에 정점을 찍으면서 복지의 다원성, 복지 혼합 등의 개념을 진보와 보수와 모두 받아들이게 되었고, 제3의 길, 사회적경제 등의 추구로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사회복지 분야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사회적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검증하는 이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분석에 대해서는 제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가설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상당히 높게 채택이 되었다는 것이 흥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여러 변수들에 두루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 강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하거나 발전시킨 지표들은 이 분야의 후속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연구의 결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표들과 설문 문항들도 이 분야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설문 문항들은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도 다양성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 사회복지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강조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의 사회복지에도 적실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에 사회적경제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증되었다는 것이 고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논문이 가진 함의들을 더욱 살리기 위해서 몇 가지 점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논문이 적용되는 복지 체제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사회복지관에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적용하는 것은 복지의 민영화 및 시장화와 관련이 되는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자는 논문의 방향과 제언이 시장화와 민영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아니면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복지 관계자들에게도 당위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시대의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 흐름에 대한 비판과 그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도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08년 서구의 경제위기 이후

복지의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의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의 복지 개입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정신이 사회복지에 당위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당위적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 논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논문 자체의 내용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배경에 있는 복지국가의 성격과 개혁에 대한 논쟁에서 이 논문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논문의 저자인 이지택 선생님께서 복지분야의 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솜이 재단에 계시므로, 논문의 배경이 되는 더 큰 그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이 정신의 네 가지 요소들 가운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일반 기업이 정신과 관련된 나머지 세 개의 요소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논문의 변수들 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하나의 지수에 포함시키기에 앞서서 이 두 개념들 간의 관계를 생각해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물론, 크론바흐 알파나 요인분석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두 개의 개념이 어떻게 하나의 변수로 합쳐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았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쟁과 선점을 위한 과감성을 측정하는 지수들과 사회적 목적에 대한 연대적 추구를 측정하는 지수가 하나의 변수로 합쳐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더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배귀희(2011) 선생님의 논문도 찾아봤지만, 사회적 기업이 정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은 있어도 어떻게 두 개념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 설명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지속성에 해당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도 기업이 정신과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라는 것이 진취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과감한 경영을 하는 기업이 정신과 반드시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념과 변수, 그리고 조작적 정의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민주성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 5쪽 표에서는 적응성과 정치적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저는 바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11쪽에서 충분한 사업기간 보장과 사업 종료 시 생겨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려라는 항목들이 민주성 거버넌스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바로 느낌이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가 아니라 민주성 및 거버넌스로 구별해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4쪽에 나오는 내용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으로서, 제 생각에는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존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11쪽에 있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으로서, 기존문헌 검토와 실제 변수의 구성 사이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변수가 사회복지 및 사회적경제 연구에서 가지는 적실성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인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설문을 하신 문항들을 이 논문에 첨부해 주신다면 이러한 궁금증들 중에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통계에 대해 아는 바가 없기는 하지만, 14쪽 상관관계 표를 보면, 독립변수인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뒤에 있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다른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다면 상관관계 표에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쓰시면서 혹시 놀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논

문의 맥락을 파악하고 논문을 더욱 흥미 있게 읽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설이 모두 채택이 되는 것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논문의 재미가 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자의 입장 뿐만이 아니라 저자의 입장에서든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실증 결과 다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면, 역설적으로 그 실증연구를 통해 내 생각에 변화를 줄 만한 새로운 배움을 얻을 것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양적 연구는 새로운 것을 도출하기보다는 기존의 이론들에 의해 구성된 가설들을 연역적으로 검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통계 분석을 하다 보면 기존에 생각했던 내용이 채택이 되지 않기도 하고 또한 변수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기존의 상식을 깨는 놀라운 발견은 무엇인지, 혹은 선생님께서 이 논문을 쓰시는 동안 경험하신 놀라움이나 깨달음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이 연구가 사회복지 및 사회적경제 연구에 주는 함의와 기여에 대해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논문을 읽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부 손보기 기념강좌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 언어 연구 역사의 흐름 –

이 지택((재) 다솜이연구소 연구원)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 언어 연구 역사의 흐름 —

권 재일(서울대학교 언어학과)

- 차 례 -

1. 언어 연구의 두 관점
2.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언어 연구
3. 20세기 이후의 언어 연구
4. 언어 연구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

1. 언어 연구의 두 관점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어진 현상에 대한 수집·관찰이 첫째 단계이며, 수집·관찰된 자료에 대한 분석·기술이 둘째 단계이다. 셋째는 그 현상에 대한 해석·설명의 단계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언어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언어와 관련한 여러 현상들에 대하여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며, 이를 분석하여 구조적으로 기술하고, 나아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바로 언어학이 지향하는 연구 방법이다.

그런데 언어를 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기술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접근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자료를 검증하는 접근 방법이다. 전자를 경험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의 접근 방법이라 하고, 후자를 이성주의(다른 용어로, 합리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의 접근 방법이라 한다.

서양 철학에서 경험주의란, 실증주의에 근거하여 모든 지식의 기원을 경험에 두는, 경험적 인식을 절대시하는 사상을 말한다. 경험주의에 따르면, 개념의 의미는 그것이 실제적인 경험과 연결되었을 때만 파악될 수 있으며, 어떤 명제의 정당성은 반드시 경험에 의존해야 한다. 근대 경험주의 철학의 선구자는 17세기 영국의 베이컨(F. Bacon)과 로크(J. Locke) 등이다. 베이컨은 참다운 학문은 경험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현실 세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절대시하였다. 로크는 감각은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으며, 백지와 같이 아무 것도 없는 마음에 여러 가지 지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경험이라고 하였다. 그의 경험론적 철학체계는

버클리(G. Berkeley) 흄(D. Hume)에 영향을 주었으며 프랑스의 실증론, 유물론에도 영향을 끼쳤다. 교육학에 있어서는 코메니우스(J. Comenius) 루소(J. J. Rousseau) 페스탈로치(J. Pestalozzi) 등이 경험주의 관점에 서 있다.

이성주의란 이성이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 가능한 한 자연 이성에 의해 인식하려는 사상을 말한다. 이성주의는 본능이나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이 지니는 사고, 이성에 근거하여 논리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논증적 지식을 중요시한다. 대표적인 이성주의 철학자는 프랑스의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이다. 감각적 경험주의를 경시하고 수학적 인식을 원형으로 하는 논증적 지식을 중시한다. 이러한 견해는 고대 그리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데카르트는 수학 추론을 모델로 하여 생득관념에서 논증된 지식만이 진리라고 하며, 이성적인 사고에 의한 인식만이 진리를 보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그 후 스피노자(B. De Spinoza), 라이프니츠(G. W. Leibniz), 볼프(C. Wolff) 등의 철학자로 이어졌다.

경험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귀납적인 방법에 속한다. 이에 비해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여 언어 현상을 설명하고 언어의 본질, 언어능력을 밝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연역적인 방법에 속한다.

이천오백 년에 이르는 언어 연구의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이러한 두 연구 방법, 즉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에 입각한 두 관점은 시대에 따라 서로 순환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2.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언어 연구

2.1. 고대 그리스 시대의 언어 연구

고대 그리스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언어 기원에 대한 문제, 언어 본질에 대한 문제, 단어 및 문장 구조와 문법범주에 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언어학자들의 관심 분야는 어원론, 본질론, 문법론이었다.

그리스 시대 초기에는 철학적인 배경으로 언어 본질은 무엇이며, 언어의 문법 구조는 어떠한가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언어학의 연구 방법으로 본다면, 이성주의에 입각한 방법론이었다. 그러나 그리스 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가 행해지면서 경험주의에 입각한 방법론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고대 그리스 학자들은 언어의 본질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가졌다. 언어의 본질이란 언어 기호를 구성하는 두 가지 기본 요소인 개념과 형식, 즉 뜻과 말소리의 관계가 어떠한가의 문제이다. 이 두 요소가 맺어진 관계가 필연적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자의적인가 하는 문제이다.¹⁾ 20세기 구조주의 언어학자 소쉬르가 논의한, 바로 언어기호의 시니피에(개념)와 시니피앙(청각영상)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언어 본질에 대한 논의는 이성주의에 입각한 연구였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언어 연구는 그 이후 스토아학과(Stoic School, 기원전 4세기 후반), 알렉산드리아학과(Alexandria School, 기원전 2~3세기)로 계승되었다.²⁾ 이 두 학파는 그리스 시대의 언어 연구를 계승한 것은 공통적이지만, 철학 사상과 문학 사상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알렉산드리아학파에 이르러서는 경험주의에 입각하게 되는데, 고대 그리스 시대의 언어 연구의 중심이 점차 문헌 언어를 정밀하게 기술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예를 들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문헌학적으로 기술하려 하였다

2.2. 고대 로마 시대의 언어 연구

전반적으로 로마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답습하였다.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하면서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과 접촉했던 초기부터 그리스인들의 우월성, 예술적 업적을 기꺼이 인정하였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로부터 문자도 받아들이고 다양한 문화, 예술을 받아들였다. 언어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의 언어 연구는 그리스의 언어 연구를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철학적인 사색에 의한 연구보다는 문헌 연구를 받아들였다. 로마 시대 언어 연구의 주된 관심은 그리스 문법을 라틴 문법에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적용하느냐에 있었다.

로마 시대의 언어 연구는 앞 시대의 스토아학과와 알렉산드리아학파의 연구를

- 1) 개념과 형식이 필연적인, 직접적인, 논리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견해는 자연적인 연관성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이를 *phūsei*(자연적으로)라 하고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을 유추론자(analogist)라 하였다. 헤라클리투스(Heraclitus, 기원전 500년 무렵)와 플라톤이 대표적이다. 개념과 형식이 맺어진 관계가 논리적인 것이 아닌, 자의적인, 우연한, 관용적인 관계이라고 보는 견해는 관습과 협약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이를 *thēsei*(협약에 따라)라 하고,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을 변칙론자(anomalist)라 하였다. 데모크리투스(Democritus, 기원전 410~360)가 대표적이다.
- 2) 알렉산드리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는 트락스(Dionysios Thrax, 기원전 170~90)이다. 그의 저서 *Grammatikē Technē*에는 성, 수, 격, 인칭과 같은 굴절범주, 그리고 품사, 주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성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특히 트락스의 8품사 분류는 후세 문법 기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충실히 따랐다. 그래서 주로 문법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로마 시대의 문법 연구가 그리스의 문법 연구 대상과 방법을 따르게 된 것은 우선 비교적 두 언어의 구조가 비슷했고 또한 로마가 그리스 문명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로마 시대의 문법 연구는 규범적이고 교육적인 문법을 형식화하였다는 점이 그리스 시대의 문법 연구와는 다른 점이다. 로마 시대의 규범적이고 교육적인 문법은 중세 시대의 문법 교육과 연구의 표준이 되었고 나아가 오늘날 전통문법 및 규범문법의 기반이 되었다.³⁾

결과적으로 이러한 로마 시대의 언어 연구는 그리스의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 방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 방법으로 전환되었다고 하겠다.

2.3. 중세 시대의 언어 연구

유럽 역사에서 중세 시대란 통일된 문명과 막강한 행정력을 가진 로마제국이 무너진 시기로부터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 시기까지를 말한다. 전기 중세 시대는 12세기 이후의 후기 중세 시대와는 달리 암흑기라 한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기 중세 시대에는 언어 연구 역시 발전이 없었으나, 후기 중세 시대에는 언어 연구가 다시 시작된다.

후기 중세 시대로 오면서 문법의 논리화가 논의되었다. 라틴어에 입각하여 보편문법을 구성하려는 것으로, 언어 요소의 결합에 논리 법칙을 반영하려 한 것이다. 스콜라 철학자는 언어 현상 속에 논리적 판단이 직접 반영되고 있음을 보였다. 언어 연구에서 이러한 논리적 방법론은 근대 르네상스 시대의 언어 연구, 특히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로 계승되었다.

2.4. 근대 시대의 언어 연구

서양의 16~18세기의 철학 사상은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의 대립이라는 특성을 보였고, 두 사상 속에서 언어 연구도 이에 따르게 되었다.

경험주의는 부분적으로 중세 사상인 기존의 스콜라 철학 사상에 대항하면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철학 사상으로서의 경험주의는 특히 영국에서 발전하였다. 베이컨은 지식은 관찰에서 출발한다고 하면서 연역과 대립되는 귀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나아가서 로크, 버클리, 흄 등이 경험주의의 철학 사상을 완성하였다.

3) 로마 시대를 대표하는 문법서는 바로(Marcus Terentius Varro, 기원전 116~27)가 쓴 《라틴어》(De Lingua Latina)이다. 이 문법서는 모두 25권이었는데, 현재 5권부터 10권까지와 다른 책에 조각글이 전해올 뿐이다.

구체적으로 경험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근대 시기에 이르러서 모든 언어는 그 자체가 고유한 구조를 지닌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개별언어에 관심을 돌렸다. 로마 시대 이래 라틴 문법 하나를 표준으로 삼아 다른 모든 개별언어를 기술하여 왔으나, 이제는 개별언어를 직접 관찰하여 그 언어 고유의 문법을 기술하는 데에 이르렀다. 자연과학 방법론이 대두되면서, 언어 연구에서 문법은 자연과학 논문과 비견된다는 의식이 일어났다. 또한 영국을 중심으로 구어 자료에 관심을 가지면서 음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견해에 대립하는 철학 사상이 이성주의이다. 데카르트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성주의 철학 사상을 펼쳤다. 이성주의자들은 지식의 확실성을 인간의 이성에서 찾았다. 인간의 감각은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데카르트는 직접 언어 이론을 연구하지는 않았으나, 후대 언어학자들에게 방법론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한 점에서 데카르트는 근대 시대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에 공헌한바 크다고 하겠다. 언어의 보편성과 보편문법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의 지적 능력의 본성에 대한 연구로서 근대 시대의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는 프랑스의 포르루아얄(Port-Royal) 수도원에서 이루어진 연구였다. 포르루아얄 수도원은 1637년에 세워진 종교교육기관으로서 1661년 정치적, 종교적 분쟁 때문에 해체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은 교육 사상에서 지속되었고 문법 분야에서 그들의 업적은 근대 시대 이성문법, 일반문법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주창한 문법 이론을 포르루아얄 문법이라 한다. 문법학자 랑슬로(Claude Lancelot)와 철학자 아르노(Antione Arnauld)가 1660년에 《일반이성문법》(*Grammaire générale et raisonnée*)이라는 저서를 출판하였다. 이는 데카르트 사상을 계승하여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보편문법을 확립한 문법서이다. 문법을 논리와 관련하여 연구하며 합리적인 설명을 추구하였다. 이 문법 이론은 18세기 이성문법 연구의 표준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의 대립 관점은 인간 정신이 외부적으로 지각되는 자료의 수동적인 수용자인가, 아니면 능동적인 참여자인가에 관한 것이다. 경험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는 언어를 외부로부터 관찰된 사용법, 즉 유명한 작가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화자에 기초하여 연구하는 것이라면,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는 인간의 천부적 재능으로서 그리고 이성의 발현으로서 내부로부터의 인간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2.5. 19세기의 언어 연구: 비교언어학, 홀볼트의 언어철학

19세기 언어 연구의 특징은 첫째는 연구 대상으로 구체적인 언어 사실에 관심

을 가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연구 방법으로 비교방법이 발달하였다는 것이고, 셋째는 역사주의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이고, 넷째는 심리주의 언어관에 입각하였다는 것이다.

첫째, 19세기의 언어학의 연구 대상의 특징은 구체적 언어 사실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이다. 18세기와는 달리 19세기 초에는 구체적인 언어 자료가 언어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었는데, 이렇듯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관심과 실증주의적 방법론은 19세기 언어학의 전반적인 특징이었다. 이 때문에 언어의 논리 구조를 보편적으로 추구하려 한 18세기의 학문적 전통은 약화되었다.

둘째, 19세기 언어학의 연구 방법의 특징은 비교방법이 발달하였다는 점이다. 19세기 초부터 비교언어학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학자들은 주로 인도유럽어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언어학을 연구하였다. 우랄어족, 알타이어족, 아시아아프리카어족 등에 대해서도 당시 알려져 있었으나, 그들의 친근 관계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비교방법이 가장 발달한 것은 1870년대, 젊은이문법학과가 언어 연구를 주도했을 때였다.⁴⁾

셋째, 19세기 언어학은 역사주의를 바탕으로 하였다. 19세기 초부터 언어 연구에 있어서 역사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로맨스언어 연구에서 출발한다. 로맨스언어들의 뿌리인 라틴어가 문헌 자료로 알려져 있었던 것은 역사적 연구를 하는 좋은 조건이 되었다. 역시 젊은이문법학과 활동 시기에 역사주의가 언어학의 확고한 바탕이 되었다.

넷째, 19세기 언어학은 심리주의적인 언어관에 입각하였다. 18세기 언어학의 주류는 논리학적 언어관이었는데 19세기 언어학의 주류는 심리학적 기준을 도입하는 언어관이었다. 언어학에서의 심리주의는 19세기 전반에 걸쳐 언어학의 기본 개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세기를 대표하는 비교언어학이 경험주의에 입각하였다면,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의 일반언어학 및 언어철학은 이성주의에 바탕을 두었다고 하겠다. 언어의 창조적인 면에 대한 관심에서 훔볼트는 언어를 에르곤, 즉 문법학자의 고정되고 죽은 기술이 아니라, 에네르게이아, 즉 화자-청자의 언어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생각에서 각 언어의 음성 구조, 어휘 구조, 문법 구조를 결정하는 언어 형식의 개념, 즉 내부언어형식을 주장하였고, 또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와 같은 언어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각 언어는 개인과 민족의 정신을

4) 1870년대, 열정으로 가득 찬 언어학자들, 레스킨(August Leskien), 델브뤼크(B. Delbrück), 파울(Hermann Paul), 오스토프(Hermann Osthoff), 브루크만(Karl Brugmann) 등이 라이프치히대학에 모였다. 언어학사에서 이들을 젊은이문법학과(Junggrammatiker)라 부른다. 젊은이문법학과는 역사주의만이 과학 지식 추구에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확신하고서 매우 엄밀한 비교방법을 통해 비교언어학을 완성시켰다. 그러한 바탕에서 파울은 언어학의 고전 중의 고전인 《언어사 원리》(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1880년)를 출판하였다.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내적 완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3. 20세기의 언어 연구

3.1. 20세기 언어학의 성격

일반적으로 20세기 언어학을 구조주의 언어학이라 한다. 20세기 후반의 변형생성문법도 구조주의 이론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20세기 초기에서 변형생성문법 이전까지를 구조주의 언어학이라 한다. 20세기 언어학이 성립한 배경을 언어학적 배경과 사상적 배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언어학적 배경으로, 19세기 언어학의 특징인 역사주의와 문헌 실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학적 배경에 따라 언어 연구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통시적 연구와 함께 공시적 연구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언어 구조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결과, 구조주의 언어학이 탄생하였다. 다양한 언어 구조에 관심을 가지면서 언어유형론이 발전하였으며, 지리방언과 사회방언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었다.

둘째는 사상적 배경으로, 과학주의와 인식론의 발달에 힘입어 대상을 일반화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론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으로 언어 연구 방법에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언어 연구 방법은 체계화의 방법, 추상화와 일반화의 방법, 언어 기술의 간결성, 엄밀성, 일관성을 강조하는 객관화의 방법, 인접과학과의 협동 연구의 방법을 추구하였다.

어떤 현상 안에서 특정 요소는, 각각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웃하는 다른 요소들과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전체를 형성한다. 이를 구조라 한다. 언어를 구조체로 파악하는 방법론을 구조주의 언어학이라 한다. 구조주의 언어학은 스위스 언어학자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에 의해 성립되었다.⁵⁾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강의》(1916년)는 언어학, 기호학뿐만 아니라 20세기 학문과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언어란 체계이며, 체계로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언어란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회 현상인데, 이것이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언어의 통시적 연구와 공시적 연구를 명확하게 구별하였으며, 언어를 기호의 일종으로 보고 기호 자체에도 관심을 가졌다.

5) 현대 언어학의 대표적인 언어학자 소쉬르의 업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구조주의 언어학을 창시한 일반언어학에 대한 업적이고, 여기 못지않은 또 하나의 업적은 인도유럽어 비교언어학에 남긴 빛나는 공헌이다. 그것은 인도유럽어의 모음 체계에 관한 연구인 ‘인도유럽언어들의 원시 모음 체계에 관한 논고’(Mémoire sur le système primitif des voyelles dans les langues indo-européennes, 1879년)로서, 인도유럽어 비교언어학에서 혁신적인 의의를 지닌다.

구조주의 언어학은 크게 유럽의 구조주의 언어학과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으로 나뉜다. 유럽의 구조주의 언어학은 제네바학과, 프라하학과, 코펜하겐학과를 포함한다. 제네바학과는 언어의 정서적 요소에 대한 연구, 언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라하학과는 구체적인 언어 사실에 관심을 가진 기능주의에 입각하여, 현대 음운 이론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코펜하겐학과는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 기호논리학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⁶⁾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은 유럽의 구조주의 언어학과는 별개로 발전하였는데, 기술언어학이라고도 한다.

3.2. 경험주의: 미국의 기술언어학

기술언어학은 경험주의 방법론에 입각하고 있다. 기술언어학은 문화인류학 연구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메리카 토착인 문화를 연구하는 데서 그 방법론이 확립되었다. 미국 인류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문제는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토착인들의 다양한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었는데, 이들 문화에 대한 연구는 언어에 대한 지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현지조사를 통하여 언어를 우선 관찰하여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를 분석하여 그 언어의 구조를 기술하는 방법이였다.⁷⁾

결과적으로 기술언어학 이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낯선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중심으로 이를 기술하는 것이 중심 방법이 되었다. 따라서 귀납적이고 철저히 객관적인 연구 방법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언어 자료를 분석하여 기술하였기 때문에 언어의 음성부터 분석하여, 음운 체계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형태소를 분석하고 나아가서 문장 구조를 기술하였다. 따라서 철저히 층위적인 연구 방법이 또한 성립되었다. 그 결과 음운론과 형태론 연구는 그 방법론이 확립되어 주요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으나 통사론에 대한

6) 제네바학과는 소쉬르 학설을 계승한 고전 구조주의라 할 수 있다. 언어의 정서적 요소로서 문체 연구에 큰 성과를 남겼다. 체코 프라하학과는 러시아에서 망명한 야콥슨(Roman Jakobson), 트루베츠크이(Nikolaj Sergeevič Trubetzkoy)로 대표되는데, 음운 연구에 대한 기능주의 관점이 특징이다. 덴마크 코펜하겐학과는 1930년대 말엽 브뢰날(Viggo Brøndal)과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가 수립한 기호논리학에 기반한 구조주의 언어학이다.

7) 미국의 기술언어학은 미국 토착인 언어 연구자인 보아스(Franz Boas)에 의해 시작되었다. 기술언어학의 방법론을 확립한 학자는 사피어(Edward Sapir)이다. 사피어는 보아스의 제자로서 언어학뿐 아니라 심리학과 인류학 분야를 연구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는 《언어》(*Language :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peech*, 1921년)인데, 언어 구조의 유형을 연구하여 언어를 하나의 조직 체계라고 인식하였다.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을 완성시킨 학자는 블룸필드(Leonard Bloomfield)이다. 대표 저서는 《언어》(*Language*, 1933년)인데, 미국 기술언어학 이론을 집대성한 저서로서, 분포주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행동주의 언어관을 확립하였다. 새로운 언어 연구 방법은 한 언어 체계의 단위들이 차지할 수 있는 모든 위치의 기록과 기술, 즉 언어 단위의 분포의 확정에 입각하게 되었다.

방법론은 거의 확립되지 못하였다. 아울러 연구 방법이 철저히 객관적이었기 때문에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는 의미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되거나 배제되었다. 연구 대상을 문법론에만 국한하여 보면 형태론 연구는 문법 연구의 중심 분야가 되었지만, 통사론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인 기술언어학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언어의 구조와 체계를 분석하여 기술한 것은 언어학사에서 매우 큰 성과라 평가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언어 연구의 대상이 근본적으로 측정 가능한 물리적인 소리와 형식에 국한되어 음운론과 형태론 연구에 머물렀다. 따라서 통사론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의미 연구는 배제되었다. 기술언어학은 과학으로서의 엄밀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관의 개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미를 배제하고자 하였다.

둘째, 언어 자료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술을 강조한 결과 언어 현상에 대한 언어학적인 설명, 해석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기술언어학의 연구는 물리적 자료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각각 개별언어의 특유한 개별적 언어 구조의 기술이 중심이 되었다. 기술언어학은 개개의 언어 사실의 목록과 분포 양상을 제시하는 데에 그쳐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은 밝혀낼 수 없었다.

셋째, 낯선 언어를 연구할 경우, 그 언어의 역사를 알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기술언어학에서는 공시적인 연구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통시적인 연구, 즉 언어사의 연구가 매우 소홀히 되었다.

기술언어학의 가장 큰 이론적 한계는 언어의 객관적인 기술에 치우쳐 언어의 본성인 인간의 언어 능력을 해명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문장 구조와 문장의 의미 해석을 위한 이론이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귀납적으로 자료의 분포 분석과 분류 방법으로는 이론적인 한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 다다른 기술언어학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한 것이 바로 촘스키(Avram Noam Chomsky)이다. 그는 스승 해리스(Zellig Sabbetai Harris)와 함께 언어의 기술 방법을 연구하고 점차 수학적 방법과 생성적 방법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담하게 언어학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렇게 하여 변형생성문법 이론이 등장하였다.

3.3. 이성주의: 변형생성문법 이론

20세기 후반의 미국 언어학은 변형생성문법 이론으로 대표된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어학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더 나아가 언어학계뿐만 아니라 이웃하는 다른 분야 학문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촘스키는 분포 분석 방법으로 언어를 기술하는 것과 언어를 음성 형식으로

보고 언어를 기술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분포 분석 방법을 더욱 정밀화하여 이를 극복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언어 이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것은 자료 중심에서 설명 중심으로의 태도의 변화였다. 언어의 표면보다는 내면을 중시하는, 문장의 형성 과정과 그 규칙을 해명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촘스키는 변형생성문법 이론을 확립하여 현대 언어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⁸⁾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기술언어학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기술언어학 이론과는 이론적인 배경,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모든 것이 대조적이다.

첫째,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목표는 인간의 인지능력을 밝히기 위한, 즉 언어능력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즉, 인간에게는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 낼 능력이 있으며, 인간은 무한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유한한 규칙을 습득한다. 그러한 능력이 바로 언어능력이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비록 그 방법론의 변모를 여러 차례 거듭하여 왔지만, 이론의 이러한 목표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둘째,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통사론 중심의 이론이다. 기술언어학 이론은 방법론의 성격 때문에 통사론 이론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사론 중심의 언어인 영어의 문법 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통사론 중심의 이론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한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특징은 통사론 중심의 이론이 되었다.

셋째,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가설-검증적인 이론이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여 언어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논리의 방법이다. 따라서 더 나은 가설과 검증 방법이 제시된다면 이론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변형생성문법 이론이 그간 수없이 변모해 온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8) 촘스키는 1928년 12월 7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부모의 영향으로 다양성과 창조성을 존중하는 사상을 키우게 되었다.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해리스 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는 언어 현상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에 반대하고 설명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1951년 석사학위를 받은 이후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술 방법을 극복하고 조금씩 변형생성문법 연구로 다가가게 되어 1955년에 《언어학 이론의 논리구조》(*The Logical Structure of Linguistic Theory*)를 쓰게 되는데 이 가운데 한 부분인 Transformation Analysis로 그는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책에는 당시 언어 이론에 대한 모든 개념을 바꾸어 놓는 고도의 창조성을 지닌, 변형생성문법 연구의 바탕이 된 문법의 형식화와 평가 절차에 대한 제안이 들어 있다. 이렇게 하여 1957년 5월 촘스키의 역사적인 언어학 혁명을 알리는 책 《통사구조》(*Syntactic Structures*)가 출판되었다. 이후 촘스키는 1965년에 《통사이론의 제양상》(*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을 출판하여 변형생성문법의 표준이론이 완성하였다. 이어서 1966년에는 이성주의에 바탕을 둔 변형생성문법의 이론적 배경을 밝힌 《데카르트 언어학》(*Cartesian Linguistics*)을 출판하였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컸으며, 정치와 관련한 많은 저서를 출판하였다. 지식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도덕적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신자유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넷째,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수리-논리적인 방법론이다. 언어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수리-논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논리가 언어 현상을 분석하고 언어능력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었다.

변형생성문의 가장 큰 의의는 현대 언어학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크게 공헌을 하였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언어학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심리학, 인지 과학, 컴퓨터과학, 자연과학, 뇌과학 등에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변형생성문법은 언어학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를 계승하여 발전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스콜라 문법에서 시작하여 데카르트를 거쳐 포르루아얄 문법학자들에게 이어진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는 19세기 비교 언어학과 20세기 초 기술언어학에서는 경험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에 밀려났다. 그러나 경험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의 한계가 극에 달하면서, 즉 언어 연구가 언어의 본질 규명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던 시점에, 촘스키는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의 방법을 부활시켜 언어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시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가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⁹⁾

그러나 이러한 변형생성문법 이론 역시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지나친 이론의 추상화도 문제가 되었으며, 통사론을 강조하여 언어능력의 주요한 부분인 다른 분야의 논의가 소홀히 된 점도 문제가 되었다. 또한 촘스키의 언어능력에 관한 관점과 언어의 창조성에 관한 개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촘스키의 언어능력에 관한 개념은 문법에서 사회적 영역뿐만 아니라 화용론적 영역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언어능력이 사회언어학적 관점과 화용론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언어의 창조성 역시 촘스키가 언어를 정신적인 것으로만 이해한 결과 사회적 현상이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4. 언어 연구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

20세기 언어학은 언어 구조에 대한 공시언어학의 주류를 이루었다. 기술언어학 이론과 변형생성문법 이론을 거치면서 언어 구조에 대한 연구가 크게 발전하였다. 음운 구조, 의미 구조, 문법 구조(형태, 통사)에 대한 연구는 연구 대상이 확대되고 연구 방법이 혁신되었다. 기술언어학 이론은 경험주의 연구 방법론에 입각하였으며, 변형생성문법 이론은 이성주의 연구 방법론에 입각하였다. 그러나 최

9) 촘스키는 《언어이론의 최소주의》(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1992년)에서 모든 언어의 문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경제성의 원리를 주장한다. 즉, 모든 문법은 잉여성을 전혀 갖지 않는 최소의 체계이며, 잉여성을 지니는 문법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이성주의에 입각한 촘스키가 지향하는 보편문법의 최종 형태일 것이다.

근에 이르러 다시 경험주의에 입각한 연구 방법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계량적 방법에 바탕을 둔 사회언어학, 언어유형론이 그 예이고, 언어 구조를 연구하는 데에 말뭉치언어학이 널리 활용되는 것도 그 예이다. 최근 들어 컴퓨터의 저장용량의 확장과 데이터 처리 속도의 빨라짐에 따라 컴퓨터를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말뭉치언어학은 경험주의의 언어 연구 경향과 빅 데이터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로 중요성과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¹⁰⁾ 결과적으로 언어능력 못지않게 언어수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보편문법 못지않게 언어의 개별 기술에 관심이 높아졌다.

인류가 언어에 관심을 가진 이래, 이렇듯 경험주의 연구관과 이성주의 연구관은 순환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둘은 순환하거나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존하면서 상호 협조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언어 사실을 기술하는 경험주의의 관점도 존중되어야 하며, 언어능력을 해명하려는 이성주의의 관점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언어 사실에 대한 연구는 언어 속에 작용하고 있는 일반 원리를 찾아내는 일에 기여하며¹¹⁾, 새로운 이론은 언어 사실을 기술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언어 연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법이란 경험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 방법론과 이성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 방법론의 균형과 협력 가운데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0) 국립국어원은 과거 ‘21세기 세종계획’(1998~2007)으로 2억 어절 규모의 한국어 빅 데이터를 구축한 바 있으며, 2019년부터는 인공지능 한국어 학습용으로 18억 어절의 빅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https://corpus.korean.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말뭉치는 인공지능 및 자동 번역 기술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1) 한편 경험주의에 입각한 언어 연구는 언어 다양성 보전에 기여한다. 사라져 가는 지역 방언은 물론이고 절멸 위기에 놓인 세계 여러 언어들을 현지 조사하고 기술하여 보전하려는 연구는 현대 언어학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어와 유형론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계통론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알타이언어에 속하는 여러 언어들을 현지 조사하여 음성자료를 구축하고 기술하는 일이 그러하다. 이러한 언어 다양성 보전은 인류 문화유산 보전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

도움 받은 글

- 강 범모 (역), 「언어학의 역사」(서울: 한국문화사, 2007). (Robins, R., *A Short History of Linguistics*(London: Longman, 1997, 4th ed.).
- 권 재일, 「한국어 문법론」(과주: 태학사, 2012).
- 권 재일, 「언어학사 강의」(서울: (주)박이정, 2016).
- 김 방한, 「언어학논고」(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0).
- 김 방한 (역), 「언어학사」(서울: 형설출판사, 1982). (Ivic, M., *Trends in Linguistics*(The Hague: Mouton & Co., 1965).
- Allan, K., *The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Linguistic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Koerner, E. F. K. & A. Elizabeth (eds.), *Concise History of the Language Science : From Sumerians to the Cognitivists*(Oxford: Pergamon, 1995).
- Koerner, E. F. K., *Linguistic Historiography : Projects and Prospects*(Amsterdam: John Benjamins, 1999).
- Thomas, M., *Fifty Key Thinkers on Language and Linguistics*(London: Loutledge, 2011).

3부 주제 발표회

1. 한국전쟁의 국제정치학적 의미 – 평화와 번영의 자본주의 체제 성립(조의행)
2. 한국전쟁의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와 평화(조배준)
3.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동북아 평화에 던지는 시사점(김성호)
4.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양안관계(이광수)
- 5.文明충돌을 막는 한반도 文明 전환의 논리 탐색(채진원)
6. 회복적 정의의 한일 간 역사화해 가능성 탐색(박중현)

한국전쟁의 국제경제학적 의미: 평화와 번영의 자본주의 체제 성립

조 의행(서울신대)

I. 여는 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꼬박 70년이다. 일제의 식민지배 포함 약 50년의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발한 동족상잔의 전쟁은 이제 막 걸음마를 댄 국가에 폐허만을 남겼다. 이처럼 전쟁과 분단, 그리고 빈곤이라는 상처를 안고 시작했던 대한민국이었으나, 한국인들은 그 이후의 시간을 결코 헛되지 사용하지 않았다. 세계 최빈곤국 중 하나에 지내지 않았던 국가가 그 어떤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정치, 경제 및 과학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불려도 손색없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한국 정부를 참석 요청한 것은 대중국 견제라는 그의 정치·외교적 의도를 참작하더라도 오늘날 한국의 국제정치경제에서의 위상이 낮았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미미했던 한국의 존재감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실이다.

물론 한국의 당시 위상은 차치하더라도 한국전쟁 자체가 갖는 파장은 적지 않았다. 특히 국제질서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 중심의 국제정치 질서가 확립 되는데 결정적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냉전체제의 구축은 국제질서와 안보구조와 같은 한국전쟁 이후 약 3~4세기 동안 이어지는 국제정치의 큰 구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정치·안보적인 측면 외에도 국제경제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소련을 정점으로 한 공산 진영의 반대편에 있던 자유 진영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체제였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대사건은 국제정치·안보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변화의 동인 또한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많이 알려진 한국전쟁이 이끈 국제정치·안보적 변화의 모습과 함께 그동안 간과됐던 국제경제학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한편, 오늘날의 시사점 또한 검토해 볼 것이다.

II. 국제정치적 측면

한국전쟁은 1950년대 국제정치 질서를 확정한 결정적인 계기였다. 특히 전 세계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양분되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 바꾼 국제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의 연구를 활용해 한국전쟁이 국제사회에 끼친 영향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유주의 진영에서의 미국의 위상이 절대적으로 확고해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아시아 분쟁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미국을 공산주의 팽창을 막는 보호자이자 후원자로서의 선례가 되었다. 사실 한국전쟁 전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소련과의 대결에서 상징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으나, 미 군부는 소련과의 전면전이 발생하더라도 지상군까지 투입할 군사·전략적 가치는 없다고 판단했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가치도 높게 평가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미 정부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사를 대규모의 병력 파병을 결정했다. 물론 Jervis가 논의하듯이, 미국의 파병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을 둔 것이기도 했다.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 전 체코슬로바키아 합병과 같은 도발적인 공세를 거듭했을 당시 대화 상대였던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이를 마지못해 수용한 바 있다. 이를테면, 체코의 병합을 요구했던 히틀러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안일한 대응이 결국 잘못

된 학습효과를 유발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었기에, 북한의 남침 직후 미국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즉각적인 파병을 할 수 있었다. 아무리 작은 틈이나 변화도 역내 안보와 질서를 파괴할 수 있으며, 군사적 파병에 의한 손실이 있더라도 미국이 제공하는 전 지구적인 안보 우산이 결국 또 다른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한국전쟁은 미국 중심의 집단안보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정착시킨 결정적 계기이기도 했다. 집단안보는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국제연합의 헌장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공인받은 개념으로, 제51조에 의하면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발발하자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평화를 위한 연대’라는 이 조항을 신설했고, 동맹국에 대한 침략이 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노력 외에 집단안보체제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장해 나갔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1949년에 결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함과 동시에 병력과 물자를 증강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의 반대를 꺾고 서독 재무장을 허용했다. 이러한 집단안보 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확장되었다. 동남아시아에 동남아시아 조약 기구(SEATO), 태평양에는 태평양 안전 보장 조약(ANZUS), 중동과 남아시아에는 - 미국이 옵서버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른 집단안보보장기구와는 다소 다르지만 - 중양 조약 기구(CENTO, 혹은 중동 조약 기구, METO)가 설립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동북아시아에서는 비록 집단안보기구는 아니지만, 미국을 정점으로 한국과 일본의 삼각 동맹 체계를 구축되었다. 이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는 대체로 20년 정도는 유지되며 미국과 동맹국의 정치·외교·경제적 유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질서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물론 소련 또한 NATO에 대응하는 집단안보체제 바르샤바조약기구(WTO)를 창설했다.

아울러 한국전쟁 이후 국제 분쟁은 ‘제한전(the limited war)’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전쟁은 서유럽 포함 주요 전략 거점에 대규모의 미군을 주둔시켜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였다. 전쟁 발발 이후 병력 동원이 갖는 한계를 드러냈던 경험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전쟁은 승리를 위해 양측 모두 최강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전쟁이기도 했다. 즉, 냉전의 상징과 같은 ‘상호확정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의 개념이 나타난 것이다. 주지하듯이 한국전쟁 당시 초대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에 의해 핵무기 사용이 검토되기는 했으나, 미국 정부는 허용하지 않았다. 소련에서 전쟁 발발 한 해인 1949년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이기도 했으며, 핵무기 사용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문제도 걸림돌이었다. 다만 전쟁 억지력으로서의 핵의 가치는 오히려 공인받는 계기였다. 그래서 진정한 억지력은 상대에 대한 핵전력의 우위에서 유지된다는 논리로 이후 미소 양국은 핵무기경쟁, 이어 우주개발 경쟁을 이어가게 된다. 이러한 두 초강대국의 첨예한 경쟁은 한국전쟁이 ‘재래식 무기에 의한 마지막 국제전쟁’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전 인류에게 심어주었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진영의 분열이다. 한국전쟁은 소련과 중국 공산정권의 관심이 지형학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는 된 계기였다. 소련은 한국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명확하게 지양했고, 공산 진영에서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의 주체는 소련이 아닌 중국이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아시아 공산권에서 중국의 위상이 지도자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다만 한국전쟁 참전으로 타이완으로 옮긴 국민당 정부를 공략할 기회를 상실했다.

III. 국제 자본주의의 변영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한 해 전인 1944년 7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후 국제경제 질서 구축을 위한 국제통화회의를 미국 뉴햄프셔 브레튼우즈에서 소집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시행된 각국의 평가절하는 19세기 중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오며 국제경제체제를 안정적으로 지탱했던 금본위제를 파괴했다. 브레튼우즈에 모인 44개국 지도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던 금본위체제가 결국 대공황을 유발했고, 이와 같은 경제적 혼란이 곧 파시즘 등장으로 이어져 세계평화와 질서를 파괴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 협의의 결과가 금본위제로의 복귀였다. 미국 달러(35 US\$)를 금의 가격(1 Oz)과 고정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국제통화체제의 기축통화로 삼았다.

브레튼우즈 금융통화체제의 목표는 뚜렷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붕괴한 국가의 전후복구와 국제경제의 안정이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 또한 두 가지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과 자유무역이었다. 다만 일방적인 자유무역은 아니며 각국 정부는 전후복구가 원활하게 완료될 때까지 일부 보호무역과 자본통제를 용인했다. 브레튼우즈 체제 속 자유주의 진영에 속한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부터 국내경제 안정을 위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셜 플랜은 서유럽 재건의 기초는 되었을지는 몰라도 1940년대 후반에 걸쳐 유럽에 공급되는 달러가 부족했다. 금본위제에서 무제한 달러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미국의 제한적인 원조만으로 서유럽의 완전한 재건을 도모할 수는 없었다. 더 포괄적인 세계적인 유동성을 창출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또한, 종전 직후 미군 대부분이 유럽에서 철수한 것과 달리, 동유럽에 일부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공산정부 수립을 지원하는 소련의 행태는 미국뿐 아니라 전후복구에 집중해야 할 서유럽 국가에도 부담이자 위협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NATO의 대대적인 미국과 서유럽 재무장과 군사력 확충은 수요를 창출하고 지탱하게 할 재정적 버팀 막이 되었다. 재정지출 확대에 소극적인 미국 의회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서 NSC-68가 제안한 재정지출 확대에 부정적이었지만, 한국전쟁은 상원의 승인을 받는데 결정적인 돌파구가 되었다. 심지어 이 비용은 1950년 국방부가 처음 요구했던 금액의 세배에 달했다. 따라서 마셜 플랜이 종료되더라도 유럽에 대한 군사원조를 지속할 수 있었고, 미국 정부는 군사비 지출을 1950년부터 1958년까지 지속해서 확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 및 서유럽 자본주의 경제에 필요한 달러의 유동성은 한국전쟁을 통해 확보될 수 있었다. 국무장관 애치슨이 훗날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한국이 와서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

이렇듯 미국의 군사재정 확대, 그리고 미국과 서유럽의 재무장은 자본주의 세계의 유동성을 단번에 해결했다. 군사원조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재정확대는 세계 경제 확대에 필요한 달러가 서유럽뿐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에서 팽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개별 국가가 각각 짊어져야 했던 안보 비용을 미국이 상당 부분 책임지자 서유럽과 일본 등은 경제회복에 전념할 수 있었고, 이들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은 자유무역 원칙에 의해 미국 시장에서 소비되었다. 간단히 말해, 미국이 안보와 시장을 자유 진영 국가에 제공하는 국제 공공재(public goods)가 되었다. 그 결과 1950년대를 거쳐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일본 등 국가들은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 시대를 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각국 정부는 사회복지와 의료보호 제도 및 기업 규제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발달을 뒷받침했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끝나는 1970년대 초반까지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1820년 이래 그 어떤 시기보다도 국내총생산량(GDP)이 웃돌았다. 특히 한국전

쟁 특수로 인해 재빨리 경제적으로 회복한 일본의 발전모델은 - 물론 정경유착과 같은 부작용 참작해야 하지만 - 향후 한국과 타이완, 그리고 자유주의 진영의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제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IV. 나가는 글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성립된 1950년대 세계를 정치·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국전쟁 당시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했던 미국에서 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의 틈 속에서 일반 대중에게 잊힌 전쟁으로 일컬어지곤 한다. 하지만 그 세계사적 비중은 전후의 두 전쟁 못지않게 크다.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은 비로소 자유주의 세계를 대표하는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전쟁으로 미국의 집단안보체제 중심 세계질서를 재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한국전쟁이 미국뿐 아니라 서유럽 및 일본과 같은 자유 진영 국가들의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점 또한 흥미로우면서도 아쉽다.

그렇다면 이 사례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한국전쟁은 분명 우리 한국사에 서는 비극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1950년대부터 시작해 약 20여 년간 이어진 자본주의 황금기의 성격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자유 진영의 경제체제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을 착실히 따라왔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배제한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해 왔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분명 1970년대 침체일로였던 각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극심해진 빈부의 차, 이로부터 기인하는 인간 소외 현상과 같이 그 폐해 또한 적지 않다. 이에 비해 ‘자본주의의 황금기’의 자본주의는 정부에 의한 적절한 시장개입과 안정적인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런 공통적 경험과 유사한 복지 중심의 제도적 유사점을 공유할 수 있었기에 20세기 전반기 두 차례의 참화를 경험했던 유럽이 하나의 거대 정치경제공동체, 즉 유로존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이제 다시 ‘브레튼우즈 체제’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 가뜰이나 코로나 대응으로 부채가 커질 대로 커진 정부의 더 많은 시장개입을 기대해서는 곤란하다. 존 메이나드 케인스의 주장대로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며 자본주의는 그 궤도를 수정했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코로나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자본주의 또한 또 다른 변신을 준비해야 한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른바 ‘제3 섹터(the Third Sector: 시민사회)’를 풀뿌리로 한 사회적 경제의 안착과 글로벌 확장도 고려해 볼 만하다. 여전히 정치적 갈등과 상호불신이 강하게 작동하는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 또한 이와 같은 풀뿌리로부터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통해 가능하지 않을까?

<참고문헌>

- 김명섭, 「한국전쟁이 냉전체제의 구성에 미친 영향」 『국제정치논총』 43(1) (2003).
 김성주, 「국제정치와 한국전쟁」 『사회과학』 27(1) (1987).
 발람, 데이빗 & 딜먼, 브래드포드 『국제정치경제』 (민병오 외 역) (서울: 명인문화사, 2016).

- 신기현, 「한국전쟁의 현대사적 의의: 국내 및 국제적 차원」 『국제정치논총』 (10) (1990).
- 아리기, 조반니, 『장기 20세기』 (백승욱 역) (서울: 그린비, 2014).
- 정재정, 『동아시아역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 황지환,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이론적 의미: 현상타파/현상유지 국가 논의 재조명」 『국제정치논총』 52(3).
- 림, 티모시, 『동북아 정치: 변화와 지속』 (서울, 명인출판사, 2015).
- O'Brien, Robert & Williams Marc, *Global Political Economy: Evolution and Dynam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 Robert Jervis, 「The Impact of the Korea War on the Cold War」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4(4) (1980).

 Memo

Memo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동북아 평화에 던지는 시사점

김 성호 (고려대)

근대 계몽주의의 정점에 서있는 철학자로 평가되는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철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거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정치철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그는 1795년 출판한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하나의 철학적 기획』(*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 이하 『평화』로 약칭)이라는 저술을 통해 자신의 정치철학을 직접 드러낸다. 이 책에서 칸트는 당시 팽창주의 노선을 추구하던 모국 프로이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오직 권력 의지에 휩싸여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를 확장하려고 하는 지배 세력과 자국 이기주의에 휩쓸려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다수 국민들이 국제 평화를 파괴하는 화근임을 통렬히 지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인류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영구 평화’의 실천 원리를 제시한다. 이렇게 당시 유럽의 여러 열강이 자국 팽창주의에 휩싸인 와중에서 칸트는 각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또한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간에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기본으로 삼아 어떤 국가도 어떤 명분으로도 다른 국가를 침범하거나 합병할 권리가 없음을 역설한다. 이런 면에서 『평화』는 오직 국제 평화의 기반 위에서만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철학적 기획’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칸트가 추구하는 평화는 결국 국가들 사이의 평화, 곧 국제적인 평화와 공존이므로 그의 평화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 유지에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칸트가 『평화』에서 제시한, 국가들 사이의 영구 평화 유지를 위한 예비조항과 확정조항들을 중심으로 그의 평화 사상의 개요를 살펴본 후 이를 동북아 평화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다.

칸트는 『평화』에서 우리 안의 도덕적-실천적 이성이 어떤 전쟁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는 점을 들어 평화의 당위성을 주장한 후 영원한 평화는 공허한 이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우리가 점차 다가가야 할 하나의 과제임을 천명한다. 이어서 그는 국가 간의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조항들을 명시하는데 이는 6개의 예비조항, 3개의 확정조항 그리고 부수적인 추가사항으로 구성된다.

우선 예비조항에서 칸트는 평화 추구하고 지속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주목할 만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예비조항 2. 어떤 독립국가도 다른 국가에 의해 상속, 교환,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해 취득될 수 있어서는 안 된다’(344),¹⁾ ‘예비조항 3. 상비군은 점차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345), ‘예비조항 5.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헌정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346), ‘예비조항 6.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와의 전쟁 중에 미래의 평화 시에 상호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 틀림없는 적대행위, 예를 들면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협정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346). 이를 통해 칸트는 국가 또한 개인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도덕적 인격’이므로 국가를 어느 누구

1) 『평화』에서 인용한 대목의 출처는 통례대로 독일 학술원 판 『칸트 전집』의 면수를 표시했다. 이 『전집』에서 『평화』는 VIII권, 341-386면에 수록되어있다.

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 상비군은 결국 전쟁을 위한 것이며 인간을 전쟁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점, 다른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 극악무도하고 비열한 수단의 사용은 국가 간에도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

뒤이어 칸트는 세 가지 확정조항을 제시한다. 확정조항 1은 ‘각 국가에서 시민의 헌정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349)는 것이다. 칸트는 공화정을 사회 구성원의 자유라는 원리에 따라, 만인에 의존해 법칙을 수립한다는 원리에 따라, 시민들의 평등이라는 원리에 따라 수립된 유일한 체제로 여기면서 이 체제에서는 전쟁의 선포 및 부담을 오직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져야하기 때문에 전쟁의 선포에 매우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화정만이 영구 평화에 대한 전망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확정조항 2는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제에 기초해야 한다’(354)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칸트는 개별 국가들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국제연맹’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그러면서 이 연맹은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는 일종의 평화연맹으로 여기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의 평화 보장을 목표로 삼는다. 칸트는 개인들이 원초적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를 형성하여 국가의 명령에 따르듯이 국가들 또한 하나의 국제국가 또는 세계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여기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안이므로 이런 적극적인 이념 대신 소극적인 대체물로서의 연맹을 결성하는 것이 전쟁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확정조항 3은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357)는 것이다. 각 국가의 시민들은 다른 어느 국가든 일시적으로 방문할 권리를 지닌다. 하지만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를 침략할 권리는 없으므로 우호의 권리, 곧 외국을 방문한 사람들의 권리는 그곳 시민들과 평화적 교제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을 넘어서서 확장될 수는 없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있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이 평화적인 관계를 맺고 이런 관계가 바탕이 되어 인류 전체는 마침내 세계시민적 체제에 다가가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칸트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지금까지 간략히 살펴본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현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결국 평화의 조건은 여러 국가가 공화정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채택해야 하며, 여러 국제기구에 동참해야 하며, 우호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상호의존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이런 관점을 동북아의 평화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 또는 응용할 수 있는가? 동북아를 구성하는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 세 가지 요소를 인정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듯하다. 중국이나 북한이 곧바로 국제적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화적 민주주의로 전향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실적 대안은 우호를 바탕으로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는 방안일 듯하다. 다양한 경제적 연계를 형성해 국가 사이의 관계가 돌발적인 갈등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며, 갈등을 폭력적인 수단보다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편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무력 분쟁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지불해야 할 비용이 더욱 크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는 경제 교류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리라 생각된다. 폭력적 수단 때문에 경제 교류가 무너지면 국익에 막대한 손실이 된다는 점은 국가 간 폭력 사태를 막는 가장 확실한 버팀목으로 작용한다.

이런 경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도 용이하고 이 기구의 통제력 또한 커질 것이다. 예를 들어 동북아 국가 간 자유무역을 위한 기구나 체계가

갖추어지면 갈등 해소와 전쟁 방지에도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칸트가 말한 국제연맹이 반드시 유엔과 같은 범세계적인 조직일 필요는 없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더라도 관련되는 여러 국가들이 적극 참여하여 공동선을 추구하고 결속력을 다진다면 충분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시대적,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서 오늘날 동북아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생각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양안관계

이 광수(국민대)

I. 들어가며

2019년 말 중국 우한의 농축산물 시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 19 바이러스(신형 관상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빠른 감염력으로 인해 전세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초래하였다.

존스홉킨스대학의 코로나 감염 통계에 의하면 2020년 11월 22일 기준으로 전세계 확진자수 5,807만명, 사망자 1,379,508명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1200만명, 인도 900만명, 브라질 6백만명으로 많고, 프랑스와 러시아는 200만 명대,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등은 100만명을 넘어선 상태이다. 반면에 초기에 폭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했던 중국은 92,030명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데 특히 3월 이후에는 하루 확진자가 한 자리 숫자로 효과적인 통제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일본 130,866명, 대한민국 30,733명) 그리고 발병 초기인 1월부터 즉시 중국과의 통로를 봉쇄한 대만은 23일 기준 617명, 사망 6명이다. 지난 4월 말 이래 하루 10명을 넘어선 적이 없어 방역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¹⁾

코로나 팬데믹은 본질적으로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한 의료방역의 문제로 비정치적 이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대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로 명칭을 붙이거나 국제사회에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분위기, 마스크 수출입을 둘러싼 양안의 경쟁, 코로나 방역모범국 이미지를 활용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 재가입하려는 움직임, 코로나 정세에 정부인사의 상호 공식방문의 격을 높여 대만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미국과 대만의 시도 등은 모두 ‘하나의 중국’원칙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글은 통일과 독립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상호관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양안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이다.

II. 코로나 발생 이전의 양안관계 - 확정과 인정의 양안

1949년 국공내전의 결과로 중국대륙은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이 새로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고, 대만은 장제스의 중국국민당이 이주하면서 손중산이 세운 중화민국의 법통을 승계하는 형태로 분단되었다.

분단 이후 특히 1990년대 이후의 양안관계는 중국이 통일 완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 뿐만 아니라 외교력, 경제력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양안관계의 폭과 깊이를 확대시키려는 적극적인 접근법을 사용해왔다면, 대만은 상대적으로 국력의 격차를 절감하면서도 주권(통

1) Johns Hopkins University Coronavirus Resource Center <https://coronavirus.jhu.edu/>
대만 위생복지부질병관리서 <https://www.cdc.gov.tw/>(검색일 2020.11.23)

치권)을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활용하면서 경제문화적 교류를 통해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려는 소극적인 접근법으로 대응해왔다.

2000년대 이후 양안관계는 중국의 부상과 분단의 장기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체제대립이 고착화되고, 상호 정체성의 이질화가 심화되면서 대만의 탈중국화 경향이 강화되고,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은 한층더 적극적인 압박정책을 펼치면서 대만해협은 한반도와 함께 동아시아의 첨예한 분쟁지역이 되었다.

후진타오, 시진핑 등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대만의 독립시도를 제어하고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강경방식과 온건방식으로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비폭력적 방식을 주요하게 사용하지만 상황에 따라 폭력적 방식의 사용도 서슴치 않는 이른바 ‘문공무혁(文攻武赫)’이 강경수단을 통해 대만의 독립시도를 방지한다고 본다면, 대만과의 경제교류에서 양보와 배려를 하거나, 대만주민들에 대한 우대조치(惠台政策)를 통해 대만민중의 민심을 획득하는 것을 통해 양안통일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온건 방식의 활용이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대만의 총통 직위를 수행했거나, 하고있는 천수이볜, 마잉주, 차이잉원은 민주진보당과 중국국민당이라는 정당이 달랐지만, 중국의 통일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일치한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1980년대 초 덩샤오핑이 제안한 ‘일국양제 평화통일’방안이 대만의 독자적 통치권(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식 흡수통일방안으로 보고 있다. 대만은 정당에 상관없이 대만인의 미래는 2,300만 대만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국민당이 중국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 반면에, 민진당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인정은 곧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흡수통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양안관계를 양자관계의 성격이 아닌 다자적 관계의 성격도 가지게 한다. 즉 국민당이 공산당과 민진당 사이에서 중간자,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된다. 양안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대만에서의 협력자로서 국민당을 활용하려고 하며, 양안관계가 무력충돌 등 긴장상태가 고조되는 상황을 완화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005년 대만 천수이볜 정부의 통일강령과 통일위원회의 폐지, 유엔가입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와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의 ‘반분열국가법’ 제정과 무력시위를 하면서 충돌 분위기가 격화될 때 당시 국민당 주석 렌잔이 ‘평화의 여행’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중국을 방문하면서 양안의 전쟁 발생 위험도를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2008~2016년 마잉주 정부 시기에는 양안간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면서 ‘경제협력협정(ECFA)’이 체결되는 등 신공공합작 또는 차이완(CHIWAN)이라는 용어가 유행했다. 그러나 대만의 분리주의 경향은 어느 지도자의 정책이나 정당의 이념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을 벗어났다. 2014년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곧 중국경제로의 종속이 되고, 결국에는 흡수통일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발생한 ‘해바라기학생운동’과 뒤이은 지방선거에서의 야당이었던 민진당의 승리, 그리고 2016년 총통선거에서 민진당 차이잉원이 당선되고, 2020년 선거에서 더많은 득표를 하면서 재선에 성공한 것이 이를 증명하는 실제 사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기존의 강온 양면전술을 기조로 더욱 대만을 압박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2019년 1월 2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일국양제 대만방안’을 제안하면서 “양안은 하나의 중국에 속하고, 국가의 통일 추구에 함께 노력하자”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5가지를 제안했다.²⁾ 하지만 하나의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당과

2) ① 손잡고 민족부흥을 추진하여, 평화통일을 실현하자. ② ‘양제’대만방안을 모색하여, 평화통일 실현을 풍부하게 하자. ③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여 평화통일 청사진을 수호하자. ④ 양안융합발전을

민진당 모두 반대여사를 표명했다. 즉 민진당의 차이잉원은 중화민국의 총통 자격으로 시진핑이 제안한 당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언제나 92공식(양안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인식에 합의했다는 1992년의 만남)은 없고, 만남만이 있었을 뿐이다”라는 반응 보이고, 국민당은 92공식은 “하나의 중국은 각자 알아서 표현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0년 1월 11일 실시된 대만의 총통·부총통, 입법원 동시선거에서 독립성향의 민진당이 다시 승리했는데, 이는 대만민중이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방안에 대한 분명한 거부여사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³⁾ 선거 승리의 배경으로 2019년 홍콩의 ‘범죄인 송환 협정’ 반대 시위로 인한 중국의 일국양제방안에 대한 불신감의 증가하고, 미·중 무역전쟁하에서 미국의 대만 지지태도가 대만의 탈중국화 경향을 자극하였다. 이는 기존의 양안관계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대만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독립 추구 입장으로 변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즉 민진당 정부는 선거과정에서 ‘중공대리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만 내부의 친중국인사를 견제, 압박하였고, 선거 이후에는 ‘반침투법’을 제정하여 법적인 제어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만지위미정론’이라는 수세적 입장에서 더 나아가, 대만에 있는 정부가 중화민국이라는 의미로서의 ‘중화민국대만’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대만해협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중국, 대만, 미국의 잠재적 합의안인 ‘현상유지’를 영구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Ⅲ. 코로나 발생 이후의 양안관계 - 양안의 공수 전환?

대만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방역 성과를토대로 방역 모범국가로 인정받으면서, 양안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첫째, 대만은 방역 성공과 중국의 압박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행했다. 둘째, 코로나 대응을 통해 중국과 비교하여 대만의 체제 우위를 강조했다. 셋째, 방역 대응과 성과를 토대로 국제적으로 대만의 외교적 활동공간을 확대했다.

1. 방역 성공과 중국에 저항(抗中國)하기 위한 조치 : 마스크 수출금지와 반침투법 제정

대만정부의 중국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대륙위원회는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소식에 대해 중국이 관련 정보를 즉시 통보해주기를 요청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대만기업가, 학생, 가족들의 주의를 당부하면서 코로나 관련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1월 16일 우한 여행 주의를 당부하는 황색경보를 발효하고, 21일에는 아예 여행금지를 의미하는 오렌지경보를 발효했다. 22일에는 차이잉원 총통이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면서 범정부차원의 감염병 조사 관리, 국제 발병정보 파악하고 충분한 방역을 위한 소통 기제 확보, 다양한 정보 확인, 대책본부 구성 등 4가지 지시를 통지하고,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가입 허용을 다시 촉구했다.⁴⁾ 1월 20일 우한에서 귀국한 대만인이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로 판명되고, 24일에 중국인 관광객과 대만인이 확진자로 확인되자 대만 관광부서는 중

심화하여, 평화통일 기초를 다지자. ⑤ 동포의 마음을 연결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을 증진시키자. 등 5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시5조(習五條)’라고 함.

3) 台灣大選2020：兩岸關係如何影響台灣選情 2019年12月31日
<https://www.bbc.com/zhongwen/trad/chinese-news-50915774>(검색일 2020.10.23)

4) 대륙위원회 양안대사기 연보.

국여행을 중단시켰고, 경제부는 중국으로의 마스크 수출을 금지시켰다. 특히 여행객 등 일반인 승객이 항공편으로 마스크를 유출하는 것까지 제한했다. 물론 대만에서도 일반인의 마스크 격일제 구입을 실시하는 등 마스크 공급부족 문제가 심각해졌기도 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중국인의 감정적인 반발도 고려하지 않는 과감한 항중 조치로 해석된다.⁵⁾

중공대리인(中共代理人)은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발언하거나 행동하는 대만인을 지칭한다. 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⁶⁾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에 참패한 민진당 등 독립파 정치세력은 선거패배의 원인을 중국이 대만의 언론을 활용하여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보면서 대만의 일부 미디어의 보도 경향이 친중국적이라는 점을 비판했다. 이를 지적하기 위해서 중공대리인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준비했다. 2019년 10월 국민당과 친민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진당, 시대역량당, 대만기진 등 독립파 정당은 ‘해외세력활동투명법(境外勢力影響透明法)’을 제출했다.⁷⁾ 여야간의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어으나 입법원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진당의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입법원에서 통과되었고, 2020년 1월 15일 ‘반침투법’이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반침투법은 해외의 적대세력의 침투와 간여 예방,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의 확보, 중화민국의 주권 수호 및 자유민주헌정질서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모두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⁸⁾ 중공대리인 논쟁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통일전선전술에 대한 대만 독립파 진영의 우려와 비판이 작용했다. 중국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녹색공포’, ‘백색공포’ 등의 용어로 비난했다.⁹⁾ 즉 자유민주를 강조하는 민진당이 앞장서서 대만인의 사상 자유와 언론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미다. 어쨌든 중공대리인, 반침투법 등의 정치적 운동이나 법률제정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만 민진당 정부의 적극적인 대중국 입장이 나타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대만체제 비교우위 선전: 대만방역 효과 극대화 /

코로나 팬데믹은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감염 사실을 초기에 외부세계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내 대규모 감염과 해외로 전파시켰다는 것이 미국 등 서구 언론의 평가다. 코로나 발생을 처음으로 알린 의사 리원량(李文亮), 코로나 방역 대응 실패를 이유로 시진핑 주석을 비판한 법학자 쉬장룬(許章潤),¹⁰⁾ 중공중앙당교 차이샤(蔡霞) 교수¹¹⁾ 등의 내부

5) 武漢肺炎：由台灣口罩禁令引發的一場兩岸論戰, 2020년 1월 29일
<https://www.bbc.com/zhongwen/trad/chinese-news-51296645>(검색일 2020.10.23)

6) 台灣反紅媒：一篇英媒報道引發的“中共代理人”之爭, 2019년 7월 25일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49119237>(검색일 2020.11.24)

7) 台灣《境外勢力影響透明法》修法遭簡修中共代理人法 藍綠吵翻天
<https://www.rfi.fr/cn/%E4%B8%AD%E5%9B%BD/2019110>(검색일 2020.11.24)

8) 反滲透法, 2020년 1월 15일 공포,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A0030317>(검색일 2020.11.24.) 해외 적대세력의 지시, 위탁을 받아 자금, 정치헌금, 기부를 받아 공민투표 관련 활동을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新臺幣)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9) 王大可, 海外版日月談：抓“中共代理人”？民進黨搞“白色恐怖”, 2019년 11월 13일
<http://opinion.people.com.cn/n1/2019/1113/c1003-31451560.html>(검색일 2020.11.24)

10) 중국 법학자 쉬장룬, 시진핑 비판 후 체포, 2020-07-09, 중국, 코로나19 핑계로 반체제 인사 이잡듯이 잡아내, 뉴스1, 2020-02-19

11) 中 공산당 당교, '시진핑 비판' 교수에 화들짝...내부단속 '고삐', 연합뉴스, 2020-08-21

비판자들의 출현과 인신구속은 공산당의 일당전제로 유지되고 있는 중국의 권위주의 통치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한봉쇄’로 특징되는 중국의 통제위주의 방역대응은 효과를 보이면서도 서구 국가들에게는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로 평가되는 점에서 중국과 대만은 더욱 비교가 되고 있다.¹²⁾ 반면에 발생 초기부터 중국과의 통행을 신속하게 전면 봉쇄하면서 방역에서의 성공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만은 11월 23일 현재 확진자 수가 600여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도 10명을 넘지 않는 방역 모범국가로 인정받으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양안관계에서도 자신감있는 대응을 하도록 작용했다.¹³⁾ 미국의 잡지 [WIRED]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든 인물’로 차이잉원 총통, 감염병 전문가 천젠런 전 부총통, 디지털 전문가 등 3명의 대만 정치가를 표지인물로 선정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3명이 정책상의 협력과 과감하고 정확한 행동으로 코로나 확산을 제어했는데, 여기에는 중국에 대한 여행 금지명령, 마스크 실명제 배급제도 등의 효과적인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차이잉원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대만을 세계에 보여주고, 세계를 위해 더욱 많은 공헌을 합시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만 네티즌들은 ‘대만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전국민의 건강과 자유로운 생활을 지켜준 것에 감사하다’, ‘내가 한 투표에 기쁨을 느낀다’ 등의 표현으로 댓글을 달았다.

중국의 폐쇄적인 방역태도와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비민주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대만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역 조치의 수행과 놀라운 방역성과에 비교되면서 양안관계에서 대만으로 하여금 자신감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만의 자신감은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미국과 대만 관계가 정치, 군사, 경제,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하게 관계를 형성하도록 작용했다. 반면에 양안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대치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0년 9월에 발생한 중국공산당과 대만의 중국국민당과의 정기적인 연례 행사로 10여년동안 진행되어온 해협논단 행사에 국민당 대표 참가에 대한 CC TV 해협양안 사회자의 ‘평화구결’ 발언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만 민심의 반발로 인해 국민당의 참가 의사 철회로 종료된 것이다.

3. 국제공간에서의 활동 확대

코로나 감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인 2월 초 총통 선거가 종료된 지 20여일이 지난 2월 초 대만의 라이칭더(賴清德) 부총통 당선인이 미국을 방문했다.¹⁴⁾ 이는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대만 고위급 정치인(총통, 부총통, 행정원장, 행정원 부원장, 외교부장, 국방부장)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던 관례에서 벗어난 경우다. 특히 라이칭더 부총통은 민진당의 총통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도 했던 야심찬 정치가로 4년 후 민진당의 후보로 총통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라이칭더는 당선인 신분으로 미국 국가조찬기도회(National Prayer Breakfast, 매년 2월 첫째주 목요일 개최)에 참석하여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의회 의원들과 주요 인사들과 만남이 예상되었지만 트럼프와의 만남은 없었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과 의원들을 만났다. 하지만 대만 차기 부통령의 방미는 중국을 민감하게 자극한 행위였다. 중국은 군용기를 이틀간 대만해협을 건너 대

12) 자크 아탈리 "유럽이 한국 아닌 中 도시폐쇄 모델 따른 건 불운", 한국일보, 2020.11.23

13) 守住疫情榮登WIRED! 蔡英文：是所有台灣人團結一心的成果, 自由時報, 2020. 09. 12

14) 台灣候任副總統賴清德訪美：「民間人士」成為訪問華府最高級台灣官員, 2020年2月4日

<https://www.bbc.com/zhongwen/trad/chinese-news-51376202>(검색일 2020.10.23)

만영공까지 들어가면서 대만을 위협하는 비행훈련을 감행했다.¹⁵⁾ 중국의 대만관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원 대만판공실의 마샤오광 대변인은 “대만이 독립을 획책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함으로써 불안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9월에는 체코의 상원의장을 대표로 8명의 상원의원, 프라하 시장, 학계와 경제계 대표, 기자 등 총 89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방문단이 대만을 방문했다. 상원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체코를 도와준 대만에 감사를 표명했는데, 방문단은 차이잉원 총통을 접견하고, 대만의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행사에 참가하는 등의 일정을 보내고 귀국했다.¹⁶⁾ 방문기간 동안 체코 상원의장은 ‘나는 대만인’이라면서 대만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연히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고 왕이 외교부장이 “반드시 막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주재국 대사를 조치하는 등 외교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코로나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한 대만의 적극적인 외교 공세가 효과를 발휘한 사례 중의 하나다.

중국과 국경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의 방송에서 우자오셰 대만외교부장이 대만을 국가(Country)라고 칭하면서 대만의 인도투자, 산업공급망 재편, 코로나 방역, 국제무대에서 미국, 일본, 인도 등과 협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의 일국양제를 부정하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도 미디어는 우 부장을 외교부장관(foreign minister)으로 소개했다.¹⁷⁾ 인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인도 매체가 대만독립을 옹호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는 마지노선을 넘는 도발을 했다고 항의했다. 비록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중인관계에서 인도의 민간 미디어가 벌인 행동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입장에 대해 제대로 밝힐 수 없었던 과거 상황에 비추어보면 중국의 부상에 따른 관련 당사국의 반발과 코로나 방역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대만의 존재가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다.

대만의 외교적 활동의 확대는 가장 강력한 후원자 역할을 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당연한 주제와 미국의 지지하에 세계보건기구에 지속적으로 재가입 의사를 천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다.¹⁸⁾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만의 참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대만은 비정치적인 의료보건분야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압력을 받는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정부각료의 대만방문도 점점 급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8월 알렉스 에이자 보건부 장관이 코로나 방역의 성과를 보기 위해 대만을 방문한 데 이어, 9월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만과의 무역확대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문함으로써 미국의 대만 중시 입장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기존에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도 다양하게 진행했다. 우선 1979년 미중 수교 직후 바로 의회에서 대만의 안전을 미국이 책임지겠다는 의미의 6가지 보장내용을 담은 법안(六項保證)을 제정한 것을 바탕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대만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의 등급을 높인 대만여행법(台灣旅行法)과 대만의 안전을 다시금 천명한 안전보장법안(2018年亞洲再保證倡議法), 대만우방국제보호 및 강화창의법(台灣友邦國際保護及加強倡議法)을 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대만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¹⁹⁾ 트

15) 중국 공군 연이틀 대만해협 건너 비행훈련 감행, CBS노컷뉴스, 2020-02-11(검색일 2020.11.24)

16) 체코 상원의장 대만 방문...1989년 이후 체코 최고위급, 연합뉴스, 2020-08-30

17) 印방송서 "일국양제" 부정한 대만 외교장관...중국 '보복' 예고, 이데일리, 2020. 10. 17

18) 대만, 코로나19 방역 모범에도 "중국 방해로 WHO 총회 참가 못해", 이데일리, 2020-11-0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80086625964080&mediaCodeNo=257&OutLnkChk=Y>(검색일 2020.11.24)

럼프 정부 이후 10회, 2020년 한 해만 5회에 걸쳐 이루어진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는 신속, 다양, 빈번, 고품질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²⁰⁾ 전임 오바마 정부가 8년 임기동안 2010, 2011, 2015 3회 무기판매를 한 것에 비해 트럼프 정부는 취임 첫 해인 2017년 6월 처음 무기판매를 결정한 이후 매년 무기 판매가 이루어졌고, 무기 수준도 조기경보레이더와 미사일, 어뢰에서 F16 전투기, 공대지 미사일(SLAM), 하푼 대함 미사일, 초고성능 드론 등 최신형 전투기와 전차 등의 첨단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미국은 이른바 ‘대만요새화(Fortress Taiwan)’를 통한 양안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²¹⁾ 여기에 군사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²²⁾

IV. 양안 민간교류 - 끊어지지 않는 양안관계의 기초 역할

양안 민간교류는 양안의 긴장과 대립이 극한상태까지 가는 것을 방지하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양안의 평화적 환경의 조성과 대만의 자유민주체제를 전파하려는 대만 국민당과 대만의 탈중국화 경향을 방지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공유함으로써 통일 조건을 구축하려는 중국공산당의 의도가 배경이다. 한편으로 국민당은 양안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는 평화조성자(peacemaker) 역할을 통해 민진당의 대결 위주의 정책이 대만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야기자(trouble maker)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존재한다. 또한 공산당은 민간교류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문화교류가 일국양제 통일방안의 실천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양안의 민간교류는 중국(공산당)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입장이고, 대만은 민진당은 참여를 거부하고, 국민당과 민중당이 참여하고 있다.

1.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민간교류

양안의 민간교류는 이른바 3통(통신, 통상, 통행)과 4류(경제, 과학, 문화, 체육) 분야의 교류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양안의 민간교류통로는 국공대화통로 ‘양안경제무역문화논단(兩岸經貿文化論壇)’ 이외에 양안 경제인들의 소통과 협력 모임인 ‘양안기업가정상회의(兩岸企業家峰會)’, 양안 민간차원의 문교교류 통로인 ‘해협논단(海峽論壇)’, 중국의 역사유적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양안교류기지(兩岸交流基地)’, 중국 상하이시와 대만 타이베이시의 교류통로인 쌍청논단(雙城論壇)이 민간교류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²³⁾

네 종류의 교류통로는 양안의 경제무역의 통합발전, 민간문화교류의 협력 강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만 국민당은 양안의 정치경제관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수단으로 보며,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의제설정과 참여과정을 관할하면서 적극적으로 문교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입장을 보인다. 이에 대해 대만의 민진당은 네 가지 교류 통로 모두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하여, 즉 92컨센서스를 승인한다는 전제에서 구성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일부 행사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국공논단의 성격을 지닌 양안경

19) 台灣大選2020：蔡英文連任後中美的台灣政策選項與變數 2020年1月13日
<https://www.bbc.com/zhongwen/trad/world-51087790>(검색일 2020.10.23)

20) <https://zh.wikipedia.org/wiki/美国对台军售列表>(검색일 2020.11.23)

21) 트럼프의 거침없는 무기수출…거대한 요새로 변해가는 대만, 매경, 2020.10.14. (검색일 2020.11.25)

22) 미국, 이번엔 군 장성 극비 대만방문…‘중국 압박’ 가속, 매경, 2020.11.23. (검색일 2020.11.25)

23) 이광수, 양안 문화교육교류의 특징과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 통일문제연구, 2020년 제32권 1호(통권 제73호) pp. 159-188

제무역문화논단의 경우에는 2016년 차이잉원 정부 등장 이후에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²⁴⁾

<표1> 양안 경제, 무역, 문화 교류 통로²⁵⁾

명칭	양안경제무역문화논단	해협논단	해협양안중산논단	쌍성논단
목적	경제무역 협력	양안 민간교류	손중산 사상 계승	타이베이-상하이 도시 교류
1회 개최	2005. 4. 29	2009. 5. 15	2010. 12. 16	2016.8.22
개최횟수	10회	10회 2018 개최	22 성 71 곳	
2020년		9.19-25(제12회)	7, 17(제4회)	7.22 온라인 개최
2020주제		민간교류의 확대, 융합발전의 심화	중산정신 계승발전, 민족부흥 공동모색	도시방역, 스마트 경제

<표1>의 양안 경제무역문화교류 통로는 양안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교류통로이지만 국공협력을 기반으로 하면서 민진당을 고립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민진당 집권시기에는 정치적 영향을 받기도 한다.

첫 번째 교류통로 ‘양안경제무역문화논단’은 경제무역문화논단이라는 명칭에 나타나듯이 경제무역 이외에 문화교류도 진행한다. 따라서 국민당 싱크탱크인 국가정책연구기금회(國家政策研究基金會) 소속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여하여 양안 사이의 이슈와 통일, 정체성, 민족문화, 풍습, 역사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또한 국공대화채널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공 양당 지도자 만남, 양당 대화사무 부서의 교류, 기층 당조직 인사의 교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민진당 등 대만의 독립파 세력에 의해 중국의 통일전선도구로 비판받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매년 개최되었으나, 2016년 집권한 차이잉원 민진당 정부는 국공논단이 국가 기밀을 외국에 누설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기밀누설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국민당의 참여를 제한하여 2016년부터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2019년 개최와 관련하여 국민당의 우둔이 주석은 올해는 법적 제약 등의 원인으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문교교류가 정치적 영향 하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²⁶⁾

두 번째 교류통로인 ‘해협논단’은 양안 민간교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하여 문화교육분야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중국이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는 민간차원의 대규모 문교교류 통로이다. 해협논단은 ‘양안은 하나의 가족(兩岸一家親)’이라는 이념을 유지하면서, 보다 긴밀하게 대만 기층 민중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해협논단의 성격을 민간성, 기층성, 포괄성으로 정리하는데, 해협논단을 통하여 양안이 각 영역에서의 교류협력, 우의와 애향심을 공유, 공동의 경제이익 추구, 민생복지 등의 제반 문제를 포괄하여 접근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해협논단이 개최되는 시기에 중국의 대만문제 관련한 고위직 정책결정자인 전국 정협 주석, 국대판 주임이 참석하여 정책방침이나 ‘해대’조치를 발표하거나 대만의 국민당 인사들과 대화

24) 許家睿, 兩岸關係的典範轉移與新挑戰, 2015. 09. 22., 想想論壇

25) 이광수, 양안 문화교육교류의 특징과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 통일문제연구, 2020년 제32권 1호(통권 제73호) pp. 159-188

26) 芋傳媒, 國共論壇是否復辦 國民黨：謹慎考量, 2019.03.06., 中央社
<https://taronews.tw/2019/03/06/272910/> (검색일: 2019.03.22.)

를 하기도 한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회에 걸쳐 개최된 해협논단은 주로 대만과 근접한 위치에 있는 하문, 복주, 천주, 포천 등 주로 복건성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²⁷⁾ 이 밖에 해협논단은 30~40여 종류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만 명 이상의 대만 민중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²⁸⁾

세 번째 교류 통로인 ‘해협양안 중산논단’은 중산 손문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자는 목적으로 2010년 중국공산당과 대만의 국민당이 경제무역문화논단, 해협논단, 보아오논단 이후 새롭게 교류 플랫폼으로 만든 교류통로다.²⁹⁾

네 번째 교류 통로인 ‘쌍성논단(雙城論壇)’은 대만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타이베이시와 중국의 상하이시 간의 교류 통로다.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2016년 8월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상하이시 통일전선부장이 직접 타이베이를 방문하여 참석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대만에서 국민당이나 민진당에 속하지 않고 독자세력화를 시도하는 커원저 타이베이시장의 개인적 야심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커원저는 개막사를 통해 “우리(대만)는 대륙의 일단의 의견을 견지하는 것을 존중함과 동시에 대륙도 대만이 민주자유를 견지하려는 것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민간교류

코로나 팬데믹으로 양안 간의 왕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최대규모의 민간교류 플랫폼이 7월에 개최되었다. 제4회 중산논단(海峽兩岸中山論壇)이 광둥성 중산시에서 개최되었는데,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이용했다. ‘중산정신 계승과 민족부흥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는 광둥성 서기, 국대판 주임, 광둥성 통전부 서기, 중산시 서기 등이 참여했고, 대만측에서는 92공식을 인정하고 있는 신당의 위마오밍 명예주석, 국민당의 전임 주석 홍슈쥔,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만기업의 연합조직인 전국대기련 회장, 해협양안경제무역문화교류협회장이 온라인을 통해 참석했고, 2020년 총통선거에 출마했던 친민당 송추위 주석은 축하메시지를 보냈다.³⁰⁾ 이번 중산논단은 해협양안관계센터, 광둥성해협양안교류촉진회, 중산시해협양안교류촉진회, 중산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했다.³¹⁾

7월 22일에는 2020 상하이-타이베이 두 도시간의 교류통로인 쌍성논단(上海臺北城市論壇)

27) 2016년에 개최된 제8기 해협논단은 이러한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행사는 논단대회, 청년교류, 기층교류, 경제무역교류 4대 주제로 구성되고, 19개의 본 행사와 34개의 하부 행사로 나뉘어 실시했다. 행사장소는 하문, 복주, 천주, 장주 등 복건성에서 주로 진행된다. 대만민중이 13,000여명 정도 참가한 대규모 양안 문교교류 행사다. 중국은 전국정협주석 위정성(俞正聲), 국대판 주임 장즈쥔(張志軍) 등이 출석하고, 대만에서는 국민당 부주석 후즈창(胡志強), 신당(新黨) 주석 위마오밍(郁慕明) 등이 참석했다.

俞正聲出席“乐业两岸 创享未来”青创先锋汇交流活动, 2016年06月11日, 新华社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6-06/11/c_1119021919.htm (검색일: 2019.04.02.)

28) 양안교류로 인한 양안의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협논단은 최근 청년, 네티즌, 대만경제인 2세 집단, 양안결혼가정 등 네 종류의 집단을 교류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들은 양안 민중간의 정서적 유대감 향상과 문화적 일체성의 고취를 통해 양안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양안 통일에 긍정적인분위기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劉結一為塗鴉大賽點讚 用創意打破兩岸界限 2018/6/8, 중시전자보

<https://campus.chinatimes.com/20180608002156-262304> (검색일: 2019.04.02.)

29) 中山論壇將成為新形式的國共交流平臺(新華澳報),

<https://www.nsysu.edu.tw/p/404-1000-80237.php?Lang=zh-tw>(검색일: 2020.11.26)

30) 1회 2010 국대판 주임 왕이 개막사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중화를 진흥하자’, 2회 2013 국대판 주임 장즈쥔 개막사 양안관계 진전, 3회 2016 국대판 주임 장즈쥔 개막사 하나의 중국, 일국양제, 4회 국대판 주임 류제이 개막사 하나의 중국, 92공식, 일국양제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31) 第四屆中山論壇 疫後兩岸最大規模, 旺報, 2020/07/21,

<https://www.chinatimes.com/newspapers/20200721000130-260302?chdtv>(검색일: 2020.11.25)

이 ‘도시 방역과 스마트 경제’를 주제로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본래 두 도시가 격년제로 번갈아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여파로 대만 타이베이시는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두 도시의 부시장이 각각 자신들의 방역과 경제발전의 경험을 소개했으며, 논단에서는 보건의료, 산업경제교류, 스마트교통, 지역거버넌스와 협력 등 4개 주제에서 대화와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커원저 타이베이시장과 공정 상하이시장이 개막사를 통해 참여했다.

중산논단과 쌍성논단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민간교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양안의 지속적인 관계의 유지와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기능을 했다. 그러나 양안의 복잡하고도 민감한 관계는 민간교류가 정치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9월에 개최되는 해협논단에 국민당이 처음에는 참여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불참을 결정한 사실이다. 앞서 현재 대만의 여당인 민진당과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과의 교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가급적 교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당시 리덩후이 총통이 제기했던 대만은 성급히 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계급용인(戒急用忍)’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당이 주도하는 양안민간교류가 중국공산당의 대만침투의 통로가 되는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1월에 중국과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침투법’을 제정한 것이다.

맺으며

양안의 민간교류는 2005년 국공대화 이후 ‘양안경제무역문화논단’, ‘해협논단’, ‘양안중산논단’, ‘도시논단’ 등의 포럼형식을 통해 대화와 합의를 통해 상호 이익을 공유하려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들 논단의 표면적인 내용은 양안의 경제무역의 통합발전, 민간문화교류의 협력 강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논단은 대만 국민당의 시각으로는 양안의 정치경제관계의 긴밀한 협력을 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수단이며, 중국 정부 즉 공산당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의제설정과 참여과정에 대한 장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대만의 민진당의 시각으로는 모든 교류통로는 ‘하나의 중국’ 전제하에 구성·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³²⁾

양안 학자들은 이러한 양안교류에 대해서 비교적 냉정하고 현실적인 접근자세를 보인다. 즉 비록 양안 문교교류는 서로가 인식 차이가 존재하나, 상대방의 입장 변화를 과도하게 기대할 필요는 없고, 엄숙한 정치적 의제에 대한 심각한 논쟁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다. 교류를 많이 하면 양안이 서로에 대한 감성적 이해와 이성적 인지도 고양될 것이며, 교류의 확대발전에도 유리하다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실제로 분단 이후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양안의 문교교류와 상호접촉은 중단되는 것보다 계속 유지하는 것이 상호간에 유리하다고 본다. ‘교류가 교류하지 않는 것보다 낮고(交流比不交流好),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낫다는 점이다.³³⁾

탈냉전시기의 국제질서는 복합적 상호의존에 놓여져 있다. ”현재 세계는 국경을 초월한 대중매체와 대중적 이동의 시대에 점점 더 많은 중국의 이익집단과 시민들은 중국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다른 국가의 이익집단 및 시민들과 교류하고 있다. 관광, 학생과 연구자들의 교류, 전자통신매체는 중국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검열을 받고 있지만,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중국전역에 유포되고 있다. 공산당 권력자들은 중국 국경밖으로부터의 ‘정신적 오염’을 우려하고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정보의 유통을 완전히

32) 이광수, 2020

33) 이광수, 2020

통제할 수는 없다. 세계적인 상호의존이 증대하는 시대에 어떤 정부도 자국의 영토 내에서조차 진정한 자율성을 갖지 못한다.”³⁴⁾

코로나 팬데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태이다. 6천만명이 넘는 확진자이지만 얼마나 더 걸려야 끝날지도 아직 불확실하다. 결국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서 종식되겠지만 그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는 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양안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중국 내부, 양안관계, 미중관계,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34) Judith F. Kornberg & John R. Faust 지음, 이진영 등 옮김, 중국외교정책, 명인문화사, 2008. p. 291

‘문명충돌’을 막는 한반도 문명전환의 논리 탐색

채 진원(경희대)

목차

- I. 서론: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문명충돌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II. 한반도 미래질서를 보는 두 시각: 문명충돌론과 문명공존론
- III. 문명전환 패러다임: 구성주의, 동양평화론, 북한중립국론, 한국아시아방과제론
- IV. 결론

I. 서론: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문명충돌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 2020년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맞섰던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였다. 바이든이 제46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북한 비핵화 문제와 북미관계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트럼프 정부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당선 이후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관계와 미중갈등에 대비해 우리 정부의 기민한 대응과 외교안보라인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바이든의 외교안보전략은 트럼프와 다를 것이 예측된다. 트럼프는 고위급을 중심으로 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북미 양자대화를 선호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클린턴 정부가 했듯이, 단계적인 바텀업 방식의 다자외교방식으로, 한반도 주변국 6자 대화를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의 통상정책 방향도 트럼프와 다를 것이다. 트럼프는 고율 관세부과 등으로 일대일 양자주의를 선호한데 반해 바이든은 동맹국과 협력으로 중국을 사방에서 압박하는 다자주의 체제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바이든의 미중관계는 ‘민주평화체제의 확산’이라는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기에 미중갈등은 트럼프 때다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중국과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사활적 국익의 문제이기에 현재와 같은 미중갈등 변수는 고정변수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바이든 당선 이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 19로 지구촌 각국이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도 자취를 감췄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급격히 동력을 잃어버린 한반도 정세는 장시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남북관계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3년간의 외교안보노선의 교훈을 찾아보고, 우리의 외교정책노선을 더

욱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당분간 한국의 외교정책의 핵심과제는 다가오는 미중패권전쟁의 가능성 속에서 한반도의 남북관계와 주변관계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런 와중에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완수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 일일 것이다.

지난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당시 분위기는 낙관적이었다. ‘6·12 싱가포르 합의’ 이후 8개월 만에 만남이어서 난관은 있지만 일정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 관측들이 다수였었다.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계기를 통해 적대적인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있는 문명전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들은 확대회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되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답판’이 결렬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핵폐기와 제재완화에 대한 미-북의 간극이 너무 커 ‘올바른 합의’(right deal)를 위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단독 및 양자회담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완전한 제재완화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영변핵시설 이외에 더 큰 규모의 제2, 제3의 핵시설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들이 모두 포함된 핵폐기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사실상의 완전한 북핵폐기(CVID)를 요구한 것이다(조영기 2019).

하노이 회담 결렬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 은폐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완전한 북핵폐기(CVID) 입장에서 북한과 협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하노이 회담’은 빅딜(big deal)도 스몰딜(small deal)도 아닌 노딜(no deal)로 마무리되었다. 회담결렬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정세를 다시 ‘시계 제로’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2020년 한반도는 대북전단 살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살해사건, 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2020년 대한민국은 북핵위기가 다시 가중되는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안보위기에 더해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코로나19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논란과 겹치면서 한반도가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속에 빠져 미중패권전쟁의 대리전으로써 ‘제2한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20년 10월 8일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갈수록 격해지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 대해 “1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월 7일(현지시간)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키신저 전 장관은 이날 뉴욕 경제클럽이 주최한 가상토론에서 “우리(미국)와 그들(중국)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서로를 위협하지 않을 한계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홍예지 2020).

국제정치학자들은 수년 전부터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BC 5세기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이름에서 가져온 표현이다. 투키디데스는 조국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패권 전쟁이, 후대의 교훈이 되도록 하는 기록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른 스파르타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원인진단을 밝혔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부상이 점차 현실화되자 국제정치학자들은 그에 따른 미중 패권 전쟁을 예견하기 시작했고, 미래에 다가올 이러한 위험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표현했다(엘리슨 2020).

2019년 5월 30일 세계적 석학이며 베스트셀러 ‘예정된 전쟁’의 저자로도 유명한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제14회 제주포럼에 참석해서 한반도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미중대리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관계의 미래를 묻다: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한반도의 운명' 세션에서 “역사적으로 지배 국가와 부상하는 국가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제3자의 우발적인 사고가 소용돌이를 일으켜 전쟁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가 벌어졌다”며 북핵 문제가 미국과 중국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동 제주포럼에 참석한 마틴 자크(Martin Jacques)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선임연구원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자크 선임연구원은 “서구의 중국사에 대한 인식 정정이 필요하다. 중국이 전형적으로 한국 등 주변국을 통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조공 체계를 잘못 읽은 것으로, 이 시기 동아시아는 500년간 전쟁이 3번 밖에 일어나지 않을 만큼 대단히 평화로운 기간이었다”며 “중국이 세계전쟁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은 베트남을 침공했던 사례 한 번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크 연구원은 “우리가 감안해야 할 것은 굉장히 큰 변화가 전 세계속에서 일어남에 따라 더 위험한 시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변화보다 훨씬 큰 사례로, 우리는 더 폭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반드시 세계적인 작동방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미국이 영원한 '세계 넘버1'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양국의 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렇다면 세계 패권을 양분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과 외교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가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제주포럼에서 앨리슨 교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이 패권적 야욕(hegemony ambition)을 자제하고, 화해 협력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성우 2019).

또한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2019년 12월 12일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동년 12월 13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앨리슨 교수는 전날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일본 아카데미아’ 주최 학술행사에서 제2차 한국전쟁 발발 확률에 대해 “50% 이상은 아니지만, 꽤 큰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앨리슨 교수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을 계속하던 2017년 11월 이전으로 돌아갈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대 파괴 등 군사 공격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이세원 2019).

2020년 7월 25일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가 미중 대리전의 전장(戰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하면서 “냉전시대 ‘공포의 균형’이 평화를 유도한 것처럼 미·중은 직접 충돌 가능성보다는 제3의 지역에서 대리전 양상으로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는 지역 중 하나가 한반도”라고 했다(배수강, 2020).

“만일 ‘제2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누가 이길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사실 이 주제는 개인적 호기심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므로 수많은 국가 기관에서 연구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한반도가 21세기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휘말리면서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중관계 미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미 대화 및 남북관계 진전 등 실태를 풀어야 하는 난제가 남아있다. 특히,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한 논의와 연관되어 새뮤얼 헌팅톤의 ‘문명충돌론’도 다시 부활하고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소련과의 전쟁이 서구 문명권 내부에서의 싸움이였다면, 중국과의 전쟁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차원이 다른 문명권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규정한 카이론 스키너(Kiron

Skinner)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의 2019년 5월 발언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미중 갈등은 새뮤얼 헌팅톤이 말한 문명의 충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 볼턴 보좌관의 2019년 7월 연설도 있었다(차태서 2019).

이런 헌팅톤의 문명충돌론은 보편성에 기반을 둔 문명과 예외주의적인 야만의 대결을 전제 하기에 타협할 수 없는 선악의 대결구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만일 이런 문명충돌론이 워싱턴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고, 베이징 또한 ‘중국몽’과 같은 특수주의적 서사로 지속 대응할 경우, 헌팅톤이 말한 문명충돌의 예언이 자기실현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 같은 투키디데스의 함정론과 문명충돌론에 대해 어떻게 보고 대응할 것인가? 바 이든 정부의 출현으로 트럼프 정부보다 미중갈등이 더 심화되어 투키디데스의 함정론과 문명충돌론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과거로부터 교훈을 찾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남북·북미 정삼회담에서 2019년 북미정상들의 하노이 노딜 회담으로 이어진 일련의 결과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 근거할 때 한반도의 미래는 어떨까? 문명사의 관점에서 진단해보고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앞선 질문에 대한 해답과 관련해서 두 가지 시각이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문명의 충돌이 심화되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시각과 반대로 문명의 공존이 새롭게 시작되는 “평화적 공생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경쟁할 수 있다, 즉 문명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의 미래는 크게 새뮤얼 헌팅톤의 문명충돌론의 길과 반대로 하랄트 뮐러의 문명공존론의 길이라는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헌팅톤 2017).

첫째는 헌팅톤의 길로 미국 문명과 중국 문명이 근본적으로 충돌해서 이로 인해 양쪽에 긴 북한과 한국 및 한반도가 냉전의 불신과 적대적 공생관계의 늪 속에서 허우적대는 길이다. 둘째는 뮐러의 길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체제보장의 성공적인 맞교환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개선되어, 공존의 중간지대로서 평화로운 한반도가 선순환되면서 점진적으로 중국문명과 미국문명이 충돌하지 않는 길이다.

문명충돌의 관점에서 2018년 북미정삼회담을 비관적으로 평가할 수 도 있다. 즉, 북미정삼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회담에 대해,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부족하고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가 빠진 완전한 비핵화만이 언급되었다는 점, 북한의 인권문제를 언급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채 합의했다는 비판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명공존의 관점에서 2018년 북미정삼회담을 평화적 공생관계로 전환시키는 긍정적인 돌파구로 볼 수 도 있다. 즉 남북미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잡고 이에 합의한 후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무기로 주변국을 위협할 이유도 사라진다. 즉, CVID와 완전한 비핵화에 반드시 성공해야겠지만, 심지어 실제 핵을 숨겨두어도 비핵화 과정이 끝나면 그 존재를 공개하거나 그것으로 위협할 명분이나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비핵화는 문명사적으로 볼 때,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를 통한 적대관계의 종식과 맞물려서 이해해야 할 문제이다(이인엽 2018).

다시 말해서, 북한에 존재하는 핵무기와 핵시설을 제거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이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핵무기 개발의 원인을 제거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북미 관계개선을 천명한 2018년 북미정삼회담은 한반도 냉전속 적대적 공생관계의 문화를 탈냉전의 평화공존과 협력관계의 문화로 전환시키는 역사적인 계기 즉, 문명전환적인 시도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이인엽 2018).

특히, 이런 역사적인 돌파구는 국제정치이론에서도 ‘구성주의 이론’(theory of the

constructivism)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알려져 있다. 구성주의 이론은 우리가 위협을 느끼는 것은 물리적 군사력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되어 구성된 ‘악마화된 적대관계’가 결합해서 온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수천 개의 핵무기가 있어도 한국이 그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치로 동맹적 우호관계에 있다는 인지 때문이다. 반대로 북한이 미국만큼, 핵무기가 없어도, 상대를 무섭게 느끼고 대하는 것은 수 십 년간 누적되어 온 적과 동지를 가르는 반공주의의 악마화(demonization) 작업에 따른 적대적 공생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진단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과거와 같은 남북간의 냉전적 적대와 반목은 일정 자제되고 있다. 또한 남북간에 현실주의적 협상과 타협의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 관계의 성격뿐 아니라, 남북한 내부체제의 정체성 재편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는 남과 북의 내부의 긴장완화와 함께 그동안 적과 동지라는 동질성과 획일성의 논리속에 억압되었던 다양한 차이와 다름을 드러내게 하고 있다. 적과 동지의 적대적 공생관계(antagonistic symbiosis 또는 symbiotic antagonism)에서 차이와 다름이 드러나는 평화적 공생관계로의 전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식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많이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론, 문명충돌론, 구성주의 이론, 동양평화론, 영세중립국론 등을 각각의 주제로 다룬 선행연구들은 많지만, 한반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문명전환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다루는 관점은 부족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중미갈등과 남북갈등을 따로 따로 연구하거나 연결시키더라도 청교도에 기반한 미국의 민주주의와 유교에 기반한 중국의 권위주의가 날카롭게 대립한다는 ‘문명론적 변수’(토크빌 1997)보다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인 변수를 강조했었다.

기존연구에서 이런 이데올로기적 변수는 문명론적 변수보다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중국의 노선변화로 인해 미중갈등의 강도를 약하게 볼 가능성이 크다. 본 글에서는 이런 선행연구들의 의의를 계승하되 한계를 문명론의 관점에서 보완하면서 중견국이자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인 한국이 주체가 되어 추구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한 후속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글의 목적은 문명충돌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계속되는 한반도를 문명공존의 평화적 공생관계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당면한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한반도를 바라보는 두 시각으로 허팅턴의 문명충돌론과 윌러의 문명공존론을 살펴볼 것이고, 실천과제를 위한 대안적 논의로 구성주의이론, 동양평화론, 북한 영세중립국론, 한국 아시아방과제론을 검토할 것이다.

II. 한반도 미래질서를 보는 두 시각: 문명충돌론과 문명공존론

1.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

냉전 당시만 해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대립이 세계 질서의 흐름을 좌우하여 미국과 소련의 충돌, 여러 차례 벌어진 전쟁들이 이 틀 속에서 이해되었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역사의 종언』(후쿠야마 1989)이라는 책에서 사회주의의 몰락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이것은 근대적 합리성이 이룩한 역사적 종착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냉전이 해체되는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은 냉전시기 정치적 이념대립의 갈등과는 다르게 이해될 필요가 있었다. 새뮤얼 헌팅톤(Samuel Huntington)은 1993년 발표한 『문명의 충돌 The Clash of Civilizations』(헌팅톤 2017)에서 종교를 근간으로 한 문명권의 대립과 충돌이 앞으로 올 역사의 법칙이며 서구 문명과 비서구 문명 특히 서구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문명의 대립이 극심해질 것이라 전망하였다.

헌팅톤은 종교, 가치, 규범 등의 문명(civilization)이 정치적 이념대립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헌팅톤은 전 세계의 문명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동아시아는 중화문명과 일본문명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가치와 규범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들 문명간의 협력과 교류는 불가능하며 문명간 대립과 충돌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헌팅톤은 상이한 문명들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갈등이 세계정치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헌팅톤에게 문명과 문화란 매우 추상적이지만 한 사회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세대들이 우선적으로 중요성을 부여한 가치, 기준, 제도,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예컨대 문명은 크게 쓰여진 문화이며, 언어, 역사, 종교, 관습, 제도, 그리고 주민들의 주관적 자기정체성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헌팅톤은 문명의 규정에서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헌팅톤은 여러 문명권 중에서도 이슬람 문명과 중화 문명의 부상에 주목하였다. 특히, 그는 중화문명과 관련하여, 특히 중국의 부상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십 년만 더 계속되고,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겪으면서도 정치적 통합성이 유지된다면, 중국은 패권국으로 떠오를 것이고, 천오백 년 이후 세계 역사에 등장한 모든 패권국들을 초라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하였다(박종균 2002).

헌팅톤은 이처럼 새로운 패권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이 기존의 패자인 서구 문명, 특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과 이슬람 국가들 간에 군사적 유대가 강화되는 것을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유교권 문명인 중국과 북한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이슬람권 국가들에게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유교권과 이슬람권의 문명적 동맹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암시하였다.

특히, 헌팅톤은 『문명의 충돌』 이전에 쓴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에서 중화문명의 토대인 유교와 청교도에 기초한 미국의 민주주의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둘은 공존이 불가능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중화문명의 기초인 유교사상이, 청교도 습속에서 나와서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관계가 없거나(undemocratic), 민주주의에 반한다(antidemocratic)고 주장한다. 헌팅톤은 중화문명의 기초인 유교의 특징을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의 권위를 강조하므로 인해 개인의 권리보다는 개인의 의무의 강조한다고 보았다.

즉, 헌팅톤은 중화문명의 유교습속은 국가주의와 관료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약하다고 보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보장을 기초로 하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다르다고 이해하였다. 이에 유교적 규범을 비-자유주의적인 것으로 보고, 이른 바, ‘유교민주주의’라는 어휘를 ‘거짓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Huntington 1991).

이런 헌팅톤의 시각이라면, 한반도의 미래는 어둡다. 한반도는 중국문명과 미국문명이 충돌하는 문명충돌의 현장으로써, 남한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공존은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하랄트 뮐러의 문명공존론

독일의 정치학자 하랄트 뮐러(Harald Müller)는 사무엘 헌팅톤의 저작인 『문명의 충돌』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는 『문명의 충돌』에 반론하고자 『문명의 공존』(뮐러 2000)을 저술하였다. 뮐러는 우선 평화 연구가이기 때문에 21세기에도 문명간의 충돌로 인한 전쟁보다는 평화쪽에 더 관심을 두고 미래에 평화가 오길 바라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국제·국내 정치적 요소를 들고 있다.

뮐러는 국제 정치적 요소로는 UN 같은 국제 안보 기구, 그리고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제기구(EU, ASEAN, ARF, APEC, ASEM 등)를 들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요소로는 NGO, 다국적 기업 등을 들고 있다.

뮐러는 21세기의 새로운 문명, 즉 세계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원거리 이동통신을 매개로 한 세계화의 추세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세계화는 한 문명이 다른 문명과 단절된 채 대립정책을 펼 수 없도록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킴으로써 문명충돌이 아니라 문명 간 대화와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역사상 모든 문명은 새롭고 낯선 것과의 만남을 통해 발전해 왔다고 보면서 분쟁이나 갈등의 원인은 ‘문명의 이질성’이라는 차이와 다름이 아니라 소통의 단절로 인한 불안과 차별이며, 따라서 서로 이해하려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동맹을 맺고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것, 비정부 부문을 강화하고 인권을 높이는 것, 그리고 상대에 대한 관용이야말로 ‘문명충돌’을 ‘문명공존’으로 바꾸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뮐러는 문명충돌을 문명공존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계기로서 ‘문명간 대화’를 강조한다. 문명간 대화는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행위자들, 즉 경제와 예술, 정당, 노조, 협회, 비정부기구(NGO)의 우선적 과제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특히 NGO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가, 다른 문명권의 파트너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문명간 대화에서 정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뮐러는 이슬람과의 화해,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란 등을 해소하라고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 서구 또한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개혁해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국제기구라는 것은 세계 평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하면서 국제기구를 경시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또한 그는 이런 국제기구 못지않게 최근의 세계 질서에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한다. 이 기구를 통해서 세계의 분쟁 요소들을 해결해 나가라고 말한다.

이런 뮐러의 시각이라면, 한반도의 미래는 중국문명과 미국문명이 충돌하지 않는 문명공존의 현장으로써, 남한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극복되어 평화적 공생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 이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공존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III. 문명전환의 논리: 구성주의, 동양평화론, 북한영세중립국론, 한국아시아방파제론

본 장에서는 문명충돌에 맞서는 문명전환의 패러다임에 대해 살펴본다. 한반도의 정체성을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평화적 공생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구성주의, 동양평화론, 북한 영세중립국론, 한국 아시아방파제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구성주의(constructivism)

구성주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가 세계적인 냉전문화속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남북한의 관계를 적대적 공생관계로 만들어 냈는지를 정체성의 형성과 국가이익의 태도변화로 설명하는 데 적실성이 크다.

특히, 분단된 두 체제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면, 각 체제의 지배집단이 자연스럽게 배타적 비민주권력의 주체로 변질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좋다. 대체로 분단 속 두 체제의 지배 권력은 상대방을 악마로 낙인찍어 그 악에 대해 극단적 배제 정책을 쓰게 된다.

그래서 악마화(demonization)는 국가 이데올로기와 법률체계 속에 깊이 스며든다. 국가와 체제의 규범 중, 가장 심각한 법률, 이를테면 국가보안법 같은 법에 의해 상대방은 악마화되고 배제된다. 그렇게 되면, 그 체제는 포용적 민주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배타적 전체주의 체제로 변질되기 쉽다(한완상 2018).

특히,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남북 모두 인권 상황이 악화된다. 남북관계에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만들어 지고 더욱 강화된다. 남북 양 체제의 강경세력, 즉 북 군부세력과 남 냉전수구세력이 상대방에 대해 공격적 정책을 취하면 남북관계가 악화된다. 남북관계가 악화될수록 양측 강경세력의 기득권은 강화된다. 양 체제에서 자기 기반을 강화하려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면 된다(손재민 2013).

하지만 역으로 구성주의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남북관계가 어떻게 교류와 협력 및 신뢰속에서 새로운 한반도 정체성으로 평화적 공생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규범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문명공존론의 필러가 문명충돌을 문명공존으로 전환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는 문명간 대화의 방법들 즉, 국제기구와 NGO 등 시민사회가 내놓는 새로운 규범과 역할 및 운동들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구성주의는 국제질서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socially construct)된 결과라고 인식한다(Wendt 1999). 국제관계는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의 주장처럼 국력이나 물질적 능력이라는 객관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념(idea)이나 신념(belief) 및 역할(role)과 같은 규범적인 요인 역시 국제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구성주의가 국제관계의 결정요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체성(identity), 전략적 문화(strategic culture), 그리고 규범(norm)과 같은 것이다. 정체성이란 국가 또는 정치적 행위자들 사이에 공유된 집합적 자기인식(collective self-perception)이다. 전략적 문화란 국제정치의 본질적 특성 또는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믿음의 체계(sets of belief)이다. 규범이란 도전적으로 옳거나 바람직한 것에 대한 신념이고, 이러한 규범적 요인들이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윤대엽 2011).

알렉산더 웬트(A. Wendt)는 “무정부상태(anarchy)”의 국제질서는 고정불변의 상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들의 욕망과 이익의 구성에 따라 만들어 진 것이고, 이 무정부상태에서도 국가들이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구성주의’의 명제를 구체화하였다. 이런 명제는 한반도 냉전문화와 적대적 공생관계의 문화를 청산하고 개선하는데 실마리가 될 것이다.

웬트는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의 사회적 역할들이 적(enemy), 경쟁자(rival), 친구(friend)의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지배적인가에 따라서 무정부상태의 구조가 적어도 세 가지의 문화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적의 역할이 지배적일 때에는 홉스적(Hobbesian) 문화가, 경쟁자의 역할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로크적(Lockean) 문화가, 친구의 역할이 지배적일 때에는 칸트적(Kantian) 문화가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Wendt 1999, 247).

웬트의 이런 명제들은 한반도의 냉전문화와 적대적 공생관계를 탈냉전문화와 평화적 공생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구성주의는 오늘날 위기에 처한 지구생태계와 세계적 분쟁 및 갈등을 함께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그 결과 공유된 규범을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해 강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이러한 구성주의관점에서 볼 때, 북한과 한국의 인권개선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한반도의 냉전문화와 적대적 공생관계를 탈냉전문화와 평화적 공생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2. 동양평화론과 팩스 코리아나(Pax Coreana)

한반도가 미국문명과 중국문명의 충돌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공존의 문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간 잠재적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어야 하며, 이럴 때 비로소 그 하위체계인 중국과 일본갈등과 한국과 일본갈등도 보다 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한완상 2015).

문명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이 태평양이란 이름 그대로 큰 평화의 바다를 홀로 관리할 패권적 욕심을 내려놓고 서태평양지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중국과 함께 공동관리할 아량과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가 쟁점이 된다.

문명공존의 규범으로 볼 때,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평화는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함께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때 비로소 태평양지대가 평화번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위대한 평화세계 건설을 위해 이제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관점을 넘어서 문명사적 관점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G1 미국과 G2 중국간의 바람직한 새로운 세계질서가 될 것이다(한완상 2015).

그리고 일본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문명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날 아시아 여러 국가들, 특히 한민족과 중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도모했던 과거사를 솔직히 시인하고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 시인과 사과에 값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한완상 2015).

한국 시민사회와 지식인들은 반일대 혐한 갈등을 피하면서 평화헌법을 수호하려는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 이런 민간의 연대를 통해 그동안 한일 간에 불협화음을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역사 교과서 문제, 영토문제 등을 포함한 양국 간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켰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양국의 민주평화세력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한완상 2015).

이런 점에서 106년 전 한국청년 안중근 의사가 유언으로 남긴 동양평화론의 정신을 새삼 돌이켜보는 게 중요하다. 한국 중국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현실에서 계승하는 문제이다. 안중근 의사는 미완의 작품인 동양평화론에서 19세기말 국제사회가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 속에 평화유지와 공동번영이란 목표보다는 전쟁을 감행해 패권 장악에만 열중하는 냉혹한 시대임을 지적하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한·중·일 3국이 반드시 힘을 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안중근 의사는 한·중·일 3국이 평화공존하면서 중국 뤄순을 3국의 균형으로 삼고, 이곳에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해 공동은행을 설립하여, 화폐를 주조하고 공동의 군단을 구성해 영구한 평화와 행복을 추진할 ‘평화연맹’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안중근 의사의 구상은 현재의 유럽연합(EU)에 가까운 접근에 해당된다.

현 시기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한중일 시민들이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해 제국주의와 국가주의 및 배타적 민족주의를 넘어서 연대와 협력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동아시아 정체성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한완상 2015).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뒤 촛불시민혁명으로 전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한국이, 새로운 동아시아 정체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한다면, 주변국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런 주변국들의 지지와 동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마도 팍스 코레아나(Pax Coreana)의 시작일 것이다.

주변국의 동의와 지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과거 제국주의국가와 배타적 민족주의국가와 달리 한국이, 문화대국 즉, 보편적인 문명국가(헌법국가)로서 팍스 코레아나(Münkler, 2015)를 실현할 수 있느냐 여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보편적인 문명국가(헌법국가)란 본국 시민과 주변국 이웃시민들에게 시민권과 참정권을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보장하면서도 문화의 다양성을 점진적으로 수용하여 통합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국가의 운영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 애국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추구하는 국가패러다임이다(채진원 2019).

지금 남북·북미 정상회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전환의 문명들은 남북과 북미, 주변국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명전환의 코드이며,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한반도 양국이 평화공존체제를 이루어, 미중, 중일 간의 긴장과 갈등을 풀어간다면, 이것이 바로 팍스 코레아나(Pax Coreana)의 진면목”이 될 것이다. 한반도 발 세계평화, 한반도가 주도하여 이룩해가는 세계평화라고 볼 수 있다(김상준 2018).

3. 북한영세중립국론과 한국아시아방과제론

2018년 5월 21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북미정상회담 성공여부 시진핑에 달렸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중국변수’를 강조했다. 보도에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은 북한에게 당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면, “한국은 물론 북한마저 미국의 편에 서면 한반도에서 우군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북한이 망한다면 북한 난민이 동북삼성에 대거 유입될 것이고, 주한미군이 압록강과 두만강 라인까지 진주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우려해서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완충지대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고 분석했다(박형기 2018).

이상과 같이 당시 미국의 언론보도와 분석은 ‘북한의 친미국가화’를 막으면서 북한이 완충지대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중국의 입장이 얼마나 사활적 이해인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강경한 태도변화를 가져온 ‘중국의 북한완충지대 요구’를 무시하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체제보장’을 성공시킬 방안이 있을까?

아마도 한국에게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를 무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중국변수’를 고정변수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고 합리적이라면, ‘중국변수’를 고려한 가운데, 북미협상을 만족시킬 대안은 무엇일까?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체제보장’과 관련하여 영세중립국가인 ‘스위스모델’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한완상 2015),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중립국가화(neutral buffer state)”를 일괄타결로 맞교환하고,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그것을 국제적으로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중립국가화’를 지켜주는 체제보장방식으로 “박정희식 개발독재모델”을 전수하고, 중립국가화의 상징으로 “UN 아시아 지역본부”를 DMZ와 개성지역에 설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맞교환과 보증방식은 한반도에서 중미간의 패권전쟁을 줄이는 중립지대를 지키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 북한을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드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채진원 2019).

특히, 박정희 개발독재모델은 도이머이(Doi Moi 쇄신)노선의 베트남도 상당정도 수용하여 성공한 만큼, 이 모델은 북한개혁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베트남 지도부는 한국의 ‘박정희개발독재모델’을 수용하여 ‘도이머이’를 30년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미국과 수교했다(이한우 2011). 베트남 지도부는 미국과 수교조건중 하나로 캄보디아 침공하여 현 훈센정권을 세운 베트남 주둔군을 철군하는 것을 수용했다. 이것을 볼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은 박정희개발독재모델을 수용하고, 미국과 수교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철군에 해당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북한 김정은이 박정희 개발독재모델을 수용하여 경제개혁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핵 야욕을 버리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북한 경제를 개혁하고 발전시키면 북한 주민의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고 상당 기간 인기 있는 독재자로 남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요소를 반반 정도 섞은 ‘반반 경제’시스템으로는 오래 버티기 힘들다”고 밝혔다(김민서 2018).

북한 김정은도 한국처럼, 리비아모델이 아니라 ‘한국식 박정희개발독재모델’을 수용하도록 중국,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40년 전 한국 박정희 정부는 월남 패망과 미군 철수의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핵 개발을 추진했고, 미국과의 갈등과 협력속에서 핵개발 포기의 조건으로 한국에 핵 우산과 안전보장 조치를 약속받았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핵 개발 포기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경제발전을 선택했다.

우리정부는 점증하는 미중갈등속에서 ‘북한영세중립국론’과 함께 ‘한국아시아방과제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방어적 군사력’으로 통일한국이 ‘동아시아 방과제 역할’을 함으로써 미중문명의 충돌을 막는 중간지대로서의 공존지대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아시아방과제론의 핵심으로 중국에는 한반도가 미국의 중국진출 통로가 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는 한미일 동맹의 전력자산을 방어하는 아시아의 방과제가 될 것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본 글은 최근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의 당선으로 인해 미중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남북관계 역시 안보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속에서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론과 문명충돌론이 제기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한반도 문명전환의 논리를 정립하기 위한 실험적 시도로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적 시도인 만큼 많은 한계가 있다. 헌팅톤의 문명충돌론, 필러의 문명공존론, 웬트의 구성주의론 등은 기존 논의를 재현하고 있으며,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북한 영세중립국론, 한국의 아시아방과제론 등은 새롭기는 하지만 논의가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수준이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들은 추후 비판적 논의를 통해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도는 실험적 의의도 있다. 즉, 여러 선행논의를 재현하여

한반도 문명전환의 규범논리로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실천적 논의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초보적 의의도 있다.

향후 우리는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간의 문명충돌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 마련과 함께 그 속에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도모하는 대안적 담론을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한반도가 해양세력인 미국과 대륙세력인 중국의 문명충돌의 블랙홀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문명공존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간 잠재적 패권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이럴 때, 비로소 그 하위체계인 한·중·일의 갈등도 보다 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한완상 2015).

앞서 하랄트 뮐러는 문명충돌을 문명공존으로 바꾸기 위해 ‘문명간 대화’를 강조했으며, 문명간 대화의 주체로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행위자인 정당, 노조, 협회,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NGO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의 이해관계에 얽힌 국가의 정체성으로 인해 정부간 대화가 힘든 상황에서 초국가적인 시민사회간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이런 만큼, 한국 정부는 NGO와의 거버넌스적 협력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국제정치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를 문명충돌의 현상인 아시아와 한반도에 적용하여 그것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규범으로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접근은 김정은, 바이든, 문재인 등 남북미 정상들의 인식변화는 물론 변화된 국가정체성에 따른 대외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이 접근은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체계-체제-문화-개인 등의 관계를 “거시적 변화”와 “미시적 변화”와 상호관계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는 데 유용성이 크다.

이것은 정치학은 물론 교육학, 사회학, 여성학 등 학제적 연구분야에서 상호연관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 그것의 핵심은 선호, 이익, 정체성, 행동의 변화를 다룬다. 세계정부가 없는 무정부상태속에서도 국가의 이익이나 행동, 조직문화의 성격이나 정체성 그리고 사람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 가를 다룬다.

이 접근은 사람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국제사회의 정체성과 이익 및 선호와 행동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담론투쟁”을 통해 학습되고 구성되어 변해간다는 가정을 수용하기에 국가 지도자나 관료가 아닌 일반 시민들과 지식인들이 공론장을 통해 조직문화와 인식을 바꾸면서 점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데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 고진, 가라타니. 조영일 옮김, 2014. 『제국의 구조』. 서울: 도서출판 b.
- 김민서. 2018. “김정은, 核 완전히 포기하고 개발독재정체로 나가야 성공.” 세계일보(6.25).
- 김상준. 2018. “한반도 평화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팩스 코레아나.’” 다른 백년 칼럼(3.13).
- 필리, 하랄트 저, 이영희 역. 2000. 『문명의 공존』. 서울: 푸른숲.
- 박성우. 2019. “미·중 패권 속 한반도 ‘투키디데스 함정’ 피하려면?” 제주의 소리(5.30).
- 박종균. 2002. “‘문명 충돌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문명의 조화를 위하여.” 『부산장신논총』. pp. 101-127.
- 박형기. 2018. “북미정상회담 성공여부 시진핑에 달렸다-블룸버그.” 뉴스1(5.22).
- 배수강. 2020. “윤영관 前장관, ‘한반도,美中 대리전 戰場 될 수도.’” 신동아 8월호(7.25).
- 손재민. 2013. “신년 기획- 2013년을 말한다(4) 한완상 전 통일 부총리.” 경향신문(1.3).
- 앨리슨, 그레이엄 저. 정혜윤 역. 『예정된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서울: 종로서적.
- 윤대엽. 2011.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 이론, 인식과 정책.” 『통일연구』 제15권 제2호, pp. 135-176.
- 이세원. 2019. “앨리슨 전 미국방차관보, ‘2차 한국전쟁 가능성 크다.’” 연합뉴스(12.13).
- 이인엽. 2018.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통일뉴스(6.16).
- 이한우. 2011.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조영기. 2019. “‘하노이 담판’의 교훈과 과제.” Newsletter 2019-3. 한반도 선진화재단.
- 차태서. 2019. “투키디데스 함정, 킨들버거 함정, 그리고 ‘문명충돌론’의 귀환.” 여시재 주간인사이트(9.6).
- 채진원. 2019. “공화주의에 대한 시론적 논의: 민주주의, 민족(국가)주의, 세계시민주의와의 비교.” 『동향과 전망』 105호. pp. 92-128.
- 채진원. 2019. 『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 서울: 푸른길.
- 한완상. 2015.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정신 돌아볼 때! [기고] 광복 70년과 동북아 평화 : 제2의 냉전동맹을 염려하며.” 프레시안(9.8).
- 한완상. 2018. “식민지·분단·냉전의 100년을 보내고, 평화와 번영 그리고 포용의 새 시대를 내다보며.” 발제문.
- 헌팅톤, 새뮤얼 저, 이희재 역. 2017.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 홍예지. 2020. “키신저, ‘美·中 갈등 1차 세계대전 상황 될 수도.’” 파이낸셜 뉴스(10.8).
- 후쿠야마, 프랜시스 저. 함중빈 역. 1989. 『역사의 종언: 이후의 시대 공산주의는 끝났다』. 서울: 현정회.
- Alexander Wendt.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ünkler, Herfried 저. 공진성 옮김. 2015. 『제국: 평천하의 논리』. 서울: 책세상.
- Huntington, S.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회복적 정의에 따른 한일 간 역사화해 가능성 탐색

박 중현(숭실대)

I. 들어가기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오랜 경험에 못지 않게 오랜 갈등 구조를 갖고 있다. 역사적 연월에 서 출발하면 한국인들은 한반도 국가들이 일본에 많은 문물을 전래해 주었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임진전쟁으로 조선을 침략하였다. 이것도 너그럽이 용서해주고 조선 통신사를 파견해서 문화를 전파했다. 그런데 개항 이후 지속적인 침략을 통해 결국 식민 지배를 당하고 말았다. 서구 열강도 아니고 여태 아래로만 여겼던 일본에게, 식민 지배는 한국인에게 수탈과 함께 모멸감을 각인시켰다. 1965년 대규모로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일어났던 이유 중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독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심해지면서 갈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현대사에서 일본에게 한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기까지 크게 아쉬움이 없었다. 일본 좌파에게는 독재정권보다 오히려 북한에 긍정적 시선을 갖고 있었다. 국교 회복 후 한국은 일본의 사양 산업 시설 이전이나 자본 수출 기지 역할을 하였다. 경제 건설에 일본 자본이 절실했던 박정희의 욕구에 더해 한미일 반공 전선을 구축하려던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 1965년 2월 미국은 하노이 폭격과 함께 베트남에 지상군을 파견해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였다. 그 해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한국의 한일회담 반대 시위는 비상계엄이 내려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이유는 회담이 ‘굴욕적’이며 ‘일본 경제에 예측된다’는 것이었다. 35년간 식민 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1945년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 결정이 내려지자 35년 간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또 그것과 같은 신탁통치라니 수용할 수 없다며 대규모로 반탁 운동이 전개된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국처럼 일본에서도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다만 이유는 전혀 달랐다. 1960년 미국과 일본은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을 개정하였다. 한국전쟁 중에 맺어진 조약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안보투쟁’으로 평화 운동에서 시작되어 각 방면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되면 한반도 전쟁 시 일본도 자동으로 끌려들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후 한일관계는 군부 독재, 자민당 집권이라는 우파의 집권 속에 밀월관계를 유지하였다. 1982년 일본 교과서 문제로 심각하였으나 이마저도 잠시 후 가라앉았다. 독재자들이 갈등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갈등이 심각할 때는 정부가 언론에 손을 써서 무마시켰다. 따라서 징용·징병이나 식민지 보상 문제 등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갈등 상황이 전개되어도 정부가 무마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일 기본 조약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민 간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제대로 된 사죄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며, 일본은 한국이 계속 ‘사죄와 보상’만을 요구한다며 ‘한국 피로’를 호소한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상대 감정을 자신들의 정치에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강경 민족주의적 발언 만이 정치판에 난무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또한 한국에서도 편협한 내셔널리즘의 연쇄 충동을 야기하면서, 왜곡·과잉·극단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한국 사회 내에

서 친일파를 오히려 변호하거나 심지어 미화하는 분열적 이중을, 민족이나 국익을 기준으로 매사를 선악 이분법적으로 평가·재단하는 것을 비판하는 세력이 등장하였다.¹⁾

한일 간의 역사 화해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에 이 짐을 안겨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일본에서 아라이 신이치는 아라이는 일본의 전쟁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진보적 학자로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철저한 반성 위에 역사화해가 가능함을 역설하고 있다.²⁾ 와카미야는 논설위원 출신의 언론인으로 일본의 사죄와 함께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아시아인들이 이해를 하는 협조 위에서 역사화해를 이루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³⁾ 일본에서는 소수인 이들의 주장에도 많은 차이가 있으나 역사화해의 필요성을 일본에서 설파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역사교육을 전공한 필자 입장에서 미래가 암흑이라면 그것을 밝힐 무언가를 찾아보자는 것이 글의 주제이다. 그 단초로 회복적 정의⁴⁾를 통한 한일 간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 회복적 정의와 한일 관계

1. 회복적 정의와 징벌적 정의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주로 사법적 측면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 왔으나 최근 국제 정치 및 학교 교육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회복적 정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징벌적 정의(retributive justice)가 있다. 징벌적 정의란 가해자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러 사태를 바로 잡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화해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한 재판과 징벌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이 따를 수 있다. 정당한 징벌이 있는 후에야 가해자가 가해가 아닌 공존의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 정의에 입각한 과거의 극복 또는 미래 동반자로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를 후세에 교육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일본이 벌인 전쟁 책임과 연결시키는 것은 1947년 열린 도쿄 재판을 예로 들 수 있다. 전쟁을 일으킨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재판을 하고 이에 따른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또 국가는 전쟁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논의되게 될 것이었다. 물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의 반공기지로서 역할이 급했던 미국이 무배상 주장으로 제대로 된 배상은 없었다.

회복적 정의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또는 전공 영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회복적 정의를 사법적 관점에서 기본 체계를 만든 제어(H. Zehr)는 “회복적 사법 정의는 범죄 사건에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 과정이며, 범죄로 인한 손상이 무엇인지 공동으로 찾아내어 채워져야 할 욕구와 수행되어야 할 의무를 밝힘으로써 잘못된 것들을 최대한 바로잡고 치유하는

1) 정연태, 「한일협정 50주년에 성찰하는 한일갈등-난해성의 직시와 생산적 극복의 우회로」, 『역사와현실』96, 2015, p.25

2) 荒井信一, 김태웅 譯, 『역사화해는 가능한가』, 미래M&B, 2006.

3) 若宮啓文, 김충식 譯, 『화해와 내셔널리즘』, 나남, 2007, p.11.

4) Howard Zehr, Changing Lenses: A New Focus for Crime and Justice, Herald Press, 2005, 손진 역,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KAP, 2010

5) 천자현, 「다음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화해, 그리고 회복적 정의」, 『일본비평』12, 2015, pp.30~32

과정”이라 정의한다.⁶⁾

회복적 정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이다. 이를 위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회복 하도록 돕는 것과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파괴된 상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정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회복을 강조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의 긍정적 해결의 방안으로 많이 논의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싸움은 상당히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흥분을 참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학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학생들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징벌에 방점을 맞추기보다 관계 회복에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회복적 정의의 추구는 한편으로 한국인 스스로에게는 성찰적 접근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비판하는 자세와 열정과 함께 한국의 어두운 역사와 현실을 성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성찰할 만한 한국의 단면은 제법 많다. 친일 협력자 문제, 식민 유산 문제, 베트남전에서의 가해 문제, 이른바 기지촌 여성 문제,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민 문제, 의식의 식민성 문제 등이 그것이다.⁷⁾ 회복적 정의의 추구는 결국 학생 또는 시민이 편협한 국수주의자가 아닌 세계 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회복적 정의에 대하여도 여러 프리즘이 있으며,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는 회복적 정의가 처벌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불의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것이며, 다만 치유라는 형태의 건설적인 방법과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고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한일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대한 처벌과 함께 미래를 위한 관계 회복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서울에서는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 평화법정’이 열렸다.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민간법정과 학술대회가 함께 개최되었다.⁸⁾ 또한 2020년 베트남 전쟁의 민간인 피해자와 유족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 배상에 대한 소송을 처음 제기하였다.⁹⁾ 이러한 내용은 2020년부터 사용되는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가해자였던 한국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회복적 정의를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한일 관계에서 볼 때 징벌적 정의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가해자 상당수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수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회복적 정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보고,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복권을 위해 인정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때 보상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양국 또는 그 시민들 간에 관계 회복과 미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보상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배상과 다른 것으로 ‘속죄라는 도덕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다.¹⁰⁾

2. 한일 관계 회복의 난관

6) 위 논문, p.33

7) 정연태, 앞 논문, p.26

8) 이한빛, 「가해자됨을 묻기 위하여-〈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 평화법정을 중심으로-〉, 『사이간SAI』제26호, 2019를 참조

9) 2020년 5월 20일 피해자인 응우옌티탄을 대리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0) 추자현 앞 논문, p.36

이 문제를 정확히 하기 위해 일본이 중국, 한국과 국교를 재개하는 인식의 차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일 공동 선언에서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총리는 “과거에 일본국이 전쟁을 통해 중국 인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그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함과 동시에 일본의 책임을 명백히 하였다. 국가에 대한 배상은 하지 않은 이유는 배상보다 더 많은 ODA, 자본의 투자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해결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이후 중국인 한센병 피해자와 한국인 피해자가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중국은 승소하고, 한국인은 패소한 것에서 잘보여주고 있다.

반면 한국에 대하여는 한일조약을 가조인하로 온 일본 외상 시이나 에쓰사부로가 “한일 양국의 오랜 역사 가운데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서 깊이 반성하는 바이다.”라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후 어느 누구도 이 발언 이상으로 책임과 사죄를 말한 이는 없었다. ‘청구권 협정’ 정확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군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한국은 청구권을 강조한 반면 일본은 독립 축하금 형식으로 하자는 주장이 전달까지 있었다고 한다. 결국 한국의 ‘청구권’과 일본의 ‘경제 협력’을 넣는 선에서 절충되었다. 해당 협정문에는

제2조 양 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 포함) 간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결국과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라는 조문이 있다. 체결국에 대한 배상과 국민에 대한 보상(물론 일본에서는 배상이나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이 이것으로 완결되었다는 입장이고 일본 재판소에서는 이영근거하여 한국인의 피해 소송은 모두 기각되고 있다.(일부 지방재판소에서는 승소도 있으나 최고재판소에서는 모두 기각되었다.) 사실 일본이 청구권을 인정한 이유도 역청구권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다. 역청구권은 실제로 회담 중 종종 제기되었다. 한국에서는 이른바 귀속 재산이라 불리는 총독부와 일본인 소유 재산에 대한 것이다. 이는 패전 후 미군정에서 모두 인정하지 않은 바가 있다.

그러나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공개에서 일본 정부는 35년 간의 한반도 지배가 합법적인 것이었으며 그 지배와 관련해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한국인 개인의 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고 했다. 결국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것이므로 한국인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 법리적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역사갈등의 극복을 위하여는 먼저 국민국가의 기억을 넘어서는 문맥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 이런 문맥의 공유를 성취할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 바로 동아시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거의 다른 경험을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엇갈리는 시각을 극복하고 역사 인식의 공유를 넘어 역사 화해로 가기 위해 회복적 정의라는 틀 속에서 수업을 전개하였다.

Ⅲ. 회복적 정의에 따른 역사 수업

2019년은 한일 관계가 가장 심각했던 해로 한국 대법원의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2019년 7

월 한국 반도체 공정에 핵심 원료의 수출을 금지하여 한일 간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다. 해당 수업은 이 시기에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수업을 전개한 것이다.

1. 수업의 전개

가. 수업 지도안

■ 수업 목표		■ 지도상 유의점
- 강제 동원의 진상을 알 수 있다. - 강제 동원 피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찾아 볼 수 있다. - 강제 동원 문제를 통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강제 동원 관련 수업이 막연한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진행한다. - 강제 동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례들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수업 흐름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준비
도입	- 강제동원 판결문 영상을 시청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본다. - 강제 동원의 개념을 이해하고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알기 위한 수업을 진행함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영상
전개	강제 동원의 개념과 배경 이해하기 - 침략 전쟁에 동원된 사례로 징용, 징병, 일본군‘위안부’, 여자 근로정신대에 대하여 학습한다. - 도표를 분석하여 조선인까지 전쟁을 위해 동원한 이유를 찾는다. 강제 동원의 실상 파악하기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원고이기도 했던 여운택 할아버지의 증언 영상을 통하여 동원 과정, 피해 실상을 알 수 있다. - 교사용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모집, 관알선도 강제동원임을 설명한다. 강제 동원 피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법원 판결 이해하기 - 판결문 속 어려운 용어를 설명하고 판결문의 핵심을 학습한다.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 알아보기 - 일본의 험한 시위와 이를 저지하는 시민들의 노력을 살펴 본다. -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노력하였음을 알고 한일 갈등이 아닌 인권 회복 차원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여운택 할아버지 증언영상 - 험한 시위 장면 - 사진 자료 - 사료 - 학생 활동지 - 수업 PPT
정리	강제 동원 피해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정리하기 -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기억 방법과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다. - 이러한 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의 필요함을 강조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나. 수업 전개상의 특징

1) 강제 동원 판결문의 의미

수업의 도입부에 사용한 대법원 판결 동영상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 무엇 인지를 보여준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¹¹⁾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8. 10. 30.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원고들(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 시켰음.

2) 강제 동원의 진상 : 여운택 할아버지 증언

여운택 할아버지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 원고이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2013년 파기 환송된 서울고 법에서 승소한 후 얼마 안 돼 사망하였다. 이 재판은 여운택, 신천수 두 분의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

여운택 할아버지의 동영상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처음에 일본에 가는 방법이다. 그는 평양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지원해서 일본의 회사로 갔다.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자발적이 아니냐고 할 수 있으나 강제동원의 유형에는 국민 징용과 함께 할당 모집, 관 알선 등도 있다. 할아버지는 모집에 의해서 갔으나 처음에 약속과 달리 강제로 구금되다시피 혹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징용령에 의해 징용이 된다.

명찰이 달라지고, 징용에 의하게 되면 근무지를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없게 된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마찬 가지였다. 또한 강제로 저금을 내도록 하여 한국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는데 저금 통장을 받지 못했다.

3) 혐한과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는 사람들

자료 화면으로 혐한 시위 장면을 넣었다. 방송에서는 혐한만을 부각하는데 비해, 혐한에 맞서 싸우는 이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일본 사회에서 노력하는 그들이 바로 화해를 위한 파트너이고, 그들을 확산하는 것이 교류의 필요성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안을 만들도록 하였고, 혐한 시위를 저지하고, 약화시켰다. 언론에서 혐한만을 통하여 민족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자신들을 애국자로 카무푸라치(camouflage:눈속임)하고, 클릭 수를 늘리려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강제 동원의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 단체와 인물 중에 일부를 뽑았다. 이외에도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가하였다. 특히 인물과 단체에서 일본 측의 것을 뽑은 이유는 현재 한일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반일 감정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부나 시민 단체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던 시절부터 일본의 시민 사회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의 활동은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자들의 재판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를 통해 일본 사회에 양식 있는 사람들의 참여와 이해의 확산에 노력하였다.

한국의 시민 단체나 인물들보다 일본에서 더 먼저, 강력하게 이런 활동을 전개하였고,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인권을 목표로 힘을 합칠 수 있다는 점을 수업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시민 사회도 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이러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 단체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그 수요가 너무 많고, 어느 특정 단체만 신게 되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11)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supreme/media/MediaActivityViewAction.work?gubun=706&pageIndex=2&pageSize=12&seqnum=66&searchWord=>

하야시 에이다이씨는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며 많은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을 남기고 증정하였다. 계명대에서 강의도 하였던 후쿠도메 노리아키씨는 강제동원과 관련한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강제동원진상네트워크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후쿠도메씨는 병은 얻어 6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2. 학생들의 의견

학생들의 의견은 크게 3개 부류로 나뉘어 진다. 명확하게 분류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두 번째 의견이 50% 가까이를 보이고, 나머지를 다른 두 의견이 차지하였다. ① 일본과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 ②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과거를 회복해야 한다. ③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직접 학생들의 소리로 들어본다.

① 일본과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

- 김○○ : 우리나라가 더 많이 피해를 본다 해도 계속 대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사과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식으로 수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험한 시위를 하는 것을 봐서 우리나라를 아예 무시하는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 홍○○ : 현재 일본 정부와 언론 등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강제 동원에 대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나라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꾸어서 강제 노동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자신들의 과거에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 국민에게 바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자신들의 나라가 무슨 짓을 하였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과거를 회복해야 한다.

- 윤○○ : 일본이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우리나라도 그 사과를 받고 나빠진 관계가 점차 좋아지고 이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은 일본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기들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시위를 하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 양○○ : 한일 관계가 앞으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짐에 따라 우리나라와 대립하는 것 같다.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음으로써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일본과 우리나라 공동으로 프로젝트 등 친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 윤○○ :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은 일본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도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삼가며 역사왜곡 문제 등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본의 험한 시위가 계속되더라도 그것에 동요하지 않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알리는 집회 등을 원래 하였던 것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③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김○○ : 나는 서로가 존중하는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존중하게 되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현재 한국을 다녀간 일본인들에 의하면 한국을 응원하고 후기도 너무 좋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아베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불신도 커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들에게 더욱더 잘 해주어 일본 시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 ... 일본도 역사교육에 힘을 쏟으면 좋겠다. 현재 혐한이 생긴 이유도 역사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라 생각한다.
- 강○○ : 너무나도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서로 돕는다면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좋은 일이다. 일본인 모두

가 험한을 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며 서로 나쁘게 지내서 좋은 게 없다.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양○○ : 양국 간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속된 역사적 감정 때문에, 일본은 역사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태가 초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노력만이 아니라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 개인이 진실을 모른 채 과장된 언론의 말이나 선동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

IV. 나오기

수업을 통해 느낀 생각은 학생들의 역사인식에는 지금 수업에서 알게 된 것만이 아닌 이제까지 학교 안팎에서 얻게 된 의식적·무의식적 학습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피해자의 입장에 사실을 보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일본의 피해자 지원 단체들을 통해서였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의 피해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사과와 배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피해자는 함께 진행하면서 치유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일 간의 역사 화해는 국가 간의 대결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총리가 아베에서 스가 요시히데로 바뀌었음에도 큰 진전은 없다. 최근 한일의원 연맹 한국측 대표들이 총리를 만나 관계 정상화와 한국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측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생각을 내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속내인즉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그렇다면 화해는 불가능한 것인가? 그 대답을 학생들의 수업에서 찾을 수 있었다. 강제 동원 문제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본의 시민들이 있었음을 보았다.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일본군‘위안부’피해 문제, 강제동원 피해 문제 및 원폭피해 문제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것은 한국 정부도 시민 단체도 일반 시민들도 아니었다. 1990년대 경부터 이미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조직되어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들과 함께하는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하여는 분노를 금하지 못하지만 그들과 동행하면서 치유의 과정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런 노력이 확대되어 일본 정부를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여론과 시민의 힘으로 일본 정부를 전향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일부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도 열린 마음으로 그러한 희망을 바라며 함께 노력해야 한다.